

2023년 봄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연구논문】

- 지역주의 투표는 변화했는가?
: 제14~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윤지성 / 1
- 지역기반 시민응호사업의 참여 및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남지현 · 전지혜 / 27

【연구경향】

- Re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 Focusing on Estimation of Online Public Opinion
Daesik Kim / 77



발행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인 쇄 일: 2023년 3월 28일
발행인: 엄기홍 발행 일: 2023년 3월 31일
주소: 우)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39호
전화: 053-950-7396
팩스: 053-950-6206
이메일: basicdatakreditor@gmail.com 인 쇄 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홈페이지: <http://www.basicdata.kr/> (053-953-2417)

편집위원장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편집간사 민정훈(국립외교원)

편집위원 국내영역: 박원호(서울대학교),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엄기홍(경북대학교), 지병근(조선대학교), 차재권(부경대학교)

국제영역: 이유신(영남대학교), 이재목(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한범(국방대학교), 황태희(연세대학교)

해외논문: Satoshi Machida(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USA)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is issued twice in one volume per year.
Inquiries concerning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Room 339,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E-mail:basicdatakreditor@gmail.com)

Editor in Chief: Jinman Cho

Managing Editor: Jeonghun Min

Editors: Domestic Studies: Won-ho Park, Hyeon Seok Park, Kihong Eom,
Byong-Kuen Jhee, Jaekwon Cha

Global Studies: Yusin Lee, Jae Mook Lee, Hanbeom Jeong, Taehee Whang

Foreign Submission: Satoshi Machida

제8권 제1호

ISSN 2508-2183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2023년 봄

차 례

【연구논문】

- 지역주의 투표는 변화했는가?: 제14~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윤지성 / 1
- 지역기반 시민옹호사업의 참여 및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 남지현·전지혜 / 27

【연구경향】

- Re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 Focusing on Estimation of Online Public Opinion
..... Daesik Kim / 77
- 『연구방법논총』 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101
- 『연구방법논총』 저술 윤리강령 108
- 『연구방법논총』 편집 및 심사 규정 110
- 『연구방법논총』 편집위원명단 114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3.3.8.1.1>

【연구논문】

**지역주의 투표는 변화했는가?:
제14~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윤 지 성**

논문요약

본 연구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민주화 이후 30년동안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양상을 교차압력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시계열 비교로 검증한다.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연령과 거주지역이었으며, 지역 균열은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영호남 이외 지역 유권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져서 매우 유동적인 상태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역주의 투표, 지역 균열, 대통령 선거, 교차압력 점수

I. 서론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2022년은 중요한 선거가 3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열린 최초의 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이 1988년 2월 25일에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선거 시기는 12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는 4월 중순, 지방선거는 6월 초순이었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DGIST Start-up Fund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2023010017).

** DGIST 기초학부 조교수

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2017년 12월 20일이 아니라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고,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도 3월 초로 변경되었다. 대통령 선거 시기와 지방선거 시기가 매우 인접해 있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3주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대통령 취임 후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지방선거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치열한 접전 끝에 0.77%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외로 득표율 격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 또한 기존과 달리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게 호남 지역과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금 지역주의 투표가 강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단체장들이 당선되면서 지역주의 투표의 약화와 그 기저에 있는 지역균열이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결과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등장하고 심지어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정당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정당체계가 재편되는 조짐이 보였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전망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 지역균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다시 기존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나타나면서 한국 선거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며 각 선거만 바라보면 그 변화양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양상을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7번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투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사회적 균열이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교차압력 점수를 매개로 하여 영남 지역균열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는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영호남 이외 지역과 비슷하고 대구·경북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지역주의 투표 경향은 사라지고 있는가?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 있어서 지역주의 투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선거제도가 변화되고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 선거를 규정짓는 것이었다(한국선거학회 2011).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여러 사회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균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유권자 개인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종류의 사회집단에 소속되며, 사회적 맥락속의 개인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유권자 개인에 대한 사회집단의 영향력은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그 집단의 성격이나 그 집단이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종교, 언어, 인종과 같은 한 사회의 균열구조에서 비롯된 정당들에게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 구조가 각 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립셋과 록칸의 연구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어져서 그 사회의 균열구조를 반영함을 보여준다(Lipset and Rokkan 1967).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선거에 대한 기술통계 이상의 경험적 분석 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

원 선거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지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995년 지방선거의 부활로 모든 층위의 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던 지역균열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3김이라 불리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당의 맹주였던 이들의 정치적 퇴장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난 이념균열은 2002년 당시 소위 386세대라는 진보적 성향의 집단이 주도하였고 한국 정치에서 지역균열에 더해 새로운 균열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강원택 2003a, 2003b). 진보와 보수의 이념균열과 386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난 세대균열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영향력이 더 커졌고,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있다는 전망으로 발전했다(최준영·조진만 2005). 그러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에 뒤이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세대균열과 같은 새로운 균열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며 지역균열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박찬욱 등 2008).

201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주의 투표와 그 근처에 있는 지역균열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활성화되었다.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세대, 이념, 이슈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했는데(이내영 2011; 임성학 2011),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20대, 30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60대 이상의 비중이 늘어나는 유권자 구성의 비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세대균열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다(이내영·정한울 2013). 또한 2002년 당시의 소위 386세대의 세대효과는 유지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연령효과가 386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세대균열의 주장을 여전히 지지하기도 했다(김석호 등 2013; 노환희·송정민 2013). 그러나 지역균열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균열을 압도하고 있으며, 2010년대에도 지역균열은 아직도 강고하다는 연구들도 건재하다(이갑윤 2011; 윤광일 2013a, 2013b; 장은영·엄기홍 2017).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은 아직 지역균열을 넘어설 수 없으며, 한국에서 사회구조, 규범, 규칙이라는 완전한

균열구조의 조건을 갖춘 것은 지역균열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윤광일 2020).

한편 지역균열의 약화와 새로운 균열의 등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를 야기하는 지역균열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라는 새로운 균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지역균열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즉, 지역균열이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윤지성 2017, 2019, 2020; 임성학 2017; 류지영·윤광일 2018; 윤광일 2018; 정재도·이재묵 2018; 강원택 2019). 1990년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호남 대 비호남 지역으로 정당 체제가 개편되면서 호남과 영남의 지역균열 구도가 1990년대 이래로 지속되었으나(강원택 2012), 호남과 영남의 지역균열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호남 대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기존의 영남 지역균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균열의 변화와 더불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체제 재편성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박원호 2018; 강원택 2019).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지역균열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조기숙은 보수정당 분열에 의한 일시적 이탈이었을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보았다(조기숙 2020). 또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남의 지역균열 축소는 기존 지역주의 정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질책의 성격이 강해서 부산·울산·경남의 지역주의 투표 변화로 보는 것은 아직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차재권 2020).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되고 있지만, 그 변화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지역 순으로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이재묵 2022). 따라서 2012년 이후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가 탄핵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강화되었는지 혹은 큰 변동이 없는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집단으로서 거주지역의 효과를 지역주의 투표로 정의하며, 지역균열의 변화는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변화로 환원하여 설명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과 데이터, 변수

1. 연구방법

사회적 균열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인 연구는 바로 투표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컬럼비아 학파의 선거연구이다(Lazarsfeld et al. 1944; Berelson et al. 1954). 이들은 유권자 개인이 서로 상반되는 사회집단들로부터 받는 압력을 교차압력(cross-pressure)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이러한 교차압력을 받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밝혀냈다. 개인은 사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집단에 속하고, 소속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존중해서 애착심이 생기게 되어 소속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소속된 집단들의 영향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개인은 강화된 사회적 압력을 받아서 특정 성향이 강화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 소속된 집단들의 가치가 충돌하여 내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효과에 따라 다른 연령대보다 20대가 진보적 성향이고, 한국정치의 지역균열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호남 지역이 진보적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호남 지역 유권자는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할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의 경우에는 연령효과에 따른 진보적 성향과 지역균열 차원에서의 보수적 성향이 서로 충돌하여 내적 갈등을 겪게 되며, 이것이 교차압력을 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컬럼비아 학파의 연구에 의하면 교차압력을 받는 유권자들은 투표참여가 떨어지고 기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표결정의 시기도 늦다는 것이다.

그러나 컬럼비아 학파의 선거연구는 분석적 엄밀성이 떨어져서 교차압력에 대한 연구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다가 1980년대 이후 허펠트와 머츠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견노출 네트워크 연구가 등장하면서 투표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Huckfeldt and Sprague 1995; Huckfeldt et al. 2004; Mutz 2002a, 2002b). 이견노출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교차압력 점수(cross-pressure score)라는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기존의 교차압력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Brader et al. 2014). 교차압력 점수는 유권자 개인이 속한 여러 사회집단들로부터 받는 당파적 압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각 유권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가지고 당파적으로 상반된 방향의 교차압력을 받는지, 당파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압력을 받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그 사회의 균열구조에 일정정도 근거한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지표는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이 몇 개인지에 상관없이 여러 사회집단들에서 받는 당파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사용하고 종속변수로 후보 선택만 있으면 되므로 어느 설문 데이터로도 교차압력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최근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윤지성 2017, 2019, 2020; 류지영·윤광일 2018; 윤광일 2018, 2020; 이승찬·이현우 2020).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더 등의 교차압력 점수를 표준화한 교차압력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각 유권자의 교차압력이 모든 유권자들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표준편차 단위로 보여줘서 상대적 위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교차압력 점수는 다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 ①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종교, 학력, 거주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표선택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속범수의 범주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 혹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것을 통해 설문 응답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집단과 후보지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사회적 균열이 후보지지에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균열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최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의 투표연구에서의 분석과는 다른 점은 이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념을 사용하면 회귀분석 모델의 적합도는 상승하겠지만,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계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으며, 이념을 추가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회집단에 속한 것이 정당선호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매개로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이념이 매개변수

로서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 ② 1단계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응답자 개인별로 예측확률을 계산한다. 그 결과로 도출된 예측확률의 분포는 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사회적 압력에 강화되어 나타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교차압력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준다.
- ③ 2단계에서 산출한 각 후보별 예측확률의 차이를 개인별로 계산하여 교차압력 점수를 얻는다. 2명의 후보라면 후보별 예측확률의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하고,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예측확률 상위 2명 후보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한다. 후보간 예측확률의 차이가 작을수록 설문 응답자들이 교차압력을 크게 느낀다는 점을 의미한다.
- ④ 3단계에서 도출된 교차압력 점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교차압력이 크고, 1에 가까울수록 교차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직관적 해석과 반대이므로, '(1 - 3단계 값)' 방식으로 보정하여 교차압력 점수를 재산출한다.
- ⑤ 시계열 비교를 위해 4단계에서 재산출한 각 개인별 교차압력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교차압력 표준점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더 등이 제시한 교차압력 점수 계산방법에 표준화 과정을 추가한 교차압력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2. 데이터와 변수

본 연구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7회의 선거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한국선거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주관한 선거 후 여론조사 데이터이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했다. 제14대에서 제16대까지 3번의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패널 설문이라서 다른 여론조사보다 데이터의 품질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6회의 패널조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7회의 패널조사,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전과 선거 후 2회의 패널조사를 시행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이탈율을 감안해서 설문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설문을 수록했으며 일관성이 있어서 더 나은 데이터라고 보았다.

종속변수는 투표선택인데, 그 대상은 대통령 선거비용 전액보전 기준 득표율인 15% 이상인 후보로서 제14대, 제15대, 제17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가 3명이었고, 제16대, 제18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양자 대결이었다. 종속변수를 조작화할 때,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의 후보들(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윤석열)은 0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의 후보들(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이재명)은 1로, 15% 이상을 득표한 제3당의 후보들(정주영, 이인제, 이회창, 안철수)는 2로 범주화했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 연령대, 소득, 종교, 지역이다. 성별은 남성이 0, 여성이 1인 더미변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재 이상으로 범주화했으며, 연령대는 19세를 포함한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범주화했다. 소득은 다른 변수와 달리 일정 범위의 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5개 범주로 나누되, 각 범주가 대략 20%에 가깝게 조작화했다.¹⁾ 종교의 경우에는 무교를 기준변수로 하여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각을 더미변수로 구성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거주지를 지역변수로 조작화하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지역을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고 그 외 지역을 기준변수로 설정했다.

1) 소득에 대한 설문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과 같이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구간에 정확히 20%씩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 데이터의 경우 소득문항 설문이 11개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간에 최대한 20%에 가깝도록 범주화했다.

IV. 분석결과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7회의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독립변수를 인구사회학적 변수, 종속변수를 투표선택으로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혹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표 2>, <표 3>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과 거주지역이었다. 연령의 경우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정주영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이회창 후보 사이의 선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의 경우에도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 사이에서의 선택은 모든 선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은 그러했으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서 이전의 영남 지역균열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의 영향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보궐선거의 성격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고, 보수진영의 붕괴와 분열로 인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서 그 성향에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지역균열의 관점에서 볼 때 여타의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이상점(outlier)의 성격이 있으며, 그것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영남 지역균열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대구·경북 지역과 달리 영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대구·경북 지역과 달라진 것은 지역균열이 완전히 분리된 단계라기보다는 아직 유동적 해체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표 1〉 제14, 15대 대통령 선거 분석결과

| | 제14대 | | | 제15대 | | |
|-----------------------|-------------------|-------------------|-------------------|-------------------|-------------------|-------------------|
| | 김영삼- 김대중 | 김영삼- 정주영 | 김대중- 정주영 | 이회창- 김대중 | 이회창- 이인제 | 김대중- 이인제 |
| 성별 | -0.06 (0.18) | -0.19 (0.22) | -0.13 (0.24) | -0.34* (0.17) | -0.38* (0.19) | -0.04 (0.20) |
| 학력 | 0.00 (0.14) | 0.20 (0.17) | 0.20 (0.19) | -0.26 (0.14) | -0.30 (0.16) | -0.04 (0.16) |
| 연령 | -0.49** (0.08) | -0.39** (0.10) | 0.11 (0.11) | -0.15* (0.07) | -0.45** (0.09) | -0.30** (0.09) |
| 소득 | 0.10 (0.07) | 0.09 (0.08) | -0.01 (0.09) | -0.13 (0.07) | -0.05 (0.08) | 0.08 (0.08) |
| 불교 | -0.11 (0.22) | 0.00 (0.26) | 0.11 (0.29) | -0.59** (0.21) | -0.29 (0.23) | 0.29 (0.25) |
| 천주교 | -0.34 (0.36) | 0.38 (0.34) | 0.72 (0.42) | -0.25 (0.28) | 0.01 (0.32) | 0.26 (0.33) |
| 개신교 | 0.14 (0.23) | -0.48 (0.32) | -0.62 (0.34) | 0.55* (0.22) | 0.25 (0.26) | -0.30 (0.25) |
| 대구경북 | -1.78** (0.37) | -0.64* (0.31) | 1.14** (0.44) | -1.71** (0.29) | -0.80** (0.30) | 0.91* (0.36) |
| 부산울산경남 | -1.63** (0.28) | -1.90** (0.40) | -0.27 (0.45) | -1.84** (0.28) | -0.04 (0.23) | 1.80** (0.31) |
| 호남 | 4.02** (0.45) | -0.29 (1.09) | -4.32** (1.02) | 3.48** (0.60) | 0.65 (0.83) | -2.83** (0.60) |
| 충청 | -0.30 (0.28) | -0.22 (0.35) | 0.08 (0.38) | 0.50 (0.27) | 0.68* (0.32) | 0.18 (0.28) |
| 상수 | 0.97 (0.51) | -0.26 (0.61) | -1.23 (0.68) | 1.94** (0.55) | 1.92** (0.62) | -0.02 (0.63) |
| N | 986 | | | 1018 | | |
| Pseudo-R ² | 0.25 | | | 0.18 | | |

주: * p<0.05, ** p<0.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표 2〉 제16, 17, 18대 대통령 선거 분석결과

| | 제16대 | 제17대 | | | 제18대 |
|-----------------------|-------------------|-------------------|-------------------|-------------------|-------------------|
| | 이회창- 노무현 | 이명박- 정동영 | 이명박- 이회창 | 정동영- 이회창 | 박근혜- 문재인 |
| 성별 | -0.08 (0.13) | -0.25 (0.13) | -0.13 (0.16) | 0.12 (0.18) | -0.12 (0.13) |
| 학력 | -0.01 (0.11) | -0.24* (0.12) | -0.10 (0.15) | 0.14 (0.17) | 0.35** (0.12) |
| 연령 | -0.35** (0.06) | -0.29** (0.06) | -0.30** (0.07) | -0.01 (0.08) | -0.53** (0.06) |
| 소득 | -0.10 (0.05) | -0.06 (0.05) | -0.12 (0.06) | -0.06 (0.07) | -0.03 (0.05) |
| 불교 | -0.36* (0.17) | -0.59** (0.20) | 0.10 (0.20) | 0.68** (0.25) | -0.41* (0.18) |
| 천주교 | -0.17 (0.24) | 0.19 (0.20) | -0.02 (0.25) | -0.20 (0.28) | 0.28 (0.22) |
| 개신교 | -0.23 (0.17) | -0.20 (0.16) | -0.65** (0.21) | -0.45 (0.24) | -0.11 (0.16) |
| 대구경북 | -1.42** (0.21) | -1.19** (0.28) | -0.31 (0.26) | 0.88* (0.36) | -1.20** (0.24) |
| 부산울산경남 | -0.99** (0.18) | -0.46* (0.20) | 0.24 (0.21) | 0.70** (0.26) | -0.16 (0.19) |
| 호남 | 4.46** (1.01) | 2.50** (0.21) | 0.09 (0.46) | -2.41** (0.44) | 2.12** (0.28) |
| 충청 | 0.26 (0.23) | 0.02 (0.22) | 0.85** (0.22) | 0.82** (0.27) | -0.07 (0.21) |
| 상수 | 2.37** (0.45) | 1.11* (0.46) | 0.24 (0.56) | -0.87 (0.64) | 1.44** (0.47) |
| N | 1184 | | 1675 | | 1247 |
| Pseudo-R ² | 0.17 | | 0.12 | | 0.17 |

주: * p<0.05, ** p<0.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표 3〉 제19, 20대 대통령 선거 분석결과

| | 제19대 | | | 제20대 |
|-----------------------|-------------------|-------------------|-------------------|-------------------|
| | 홍준표-문재인 | 홍준표-안철수 | 문재인-안철수 | 윤석열-이재명 |
| 성별 | 0.17 (0.20) | 0.30 (0.23) | 0.13 (0.18) | 0.24 (0.14) |
| 학력 | 0.11 (0.17) | -0.09 (0.19) | -0.20 (0.17) | 0.19 (0.13) |
| 연령 | -0.93** (0.11) | -0.47** (0.12) | 0.46** (0.08) | -0.11* (0.05) |
| 소득 | 0.03 (0.08) | 0.08 (0.09) | 0.05 (0.07) | 0.11 (0.06) |
| 불교 | -0.17 (0.27) | -0.41 (0.33) | -0.24 (0.28) | -0.38 (0.20) |
| 천주교 | 0.59 (0.34) | 0.20 (0.38) | -0.40 (0.28) | -0.25 (0.23) |
| 개신교 | -0.21 (0.25) | -0.23 (0.28) | -0.02 (0.22) | -0.36* (0.17) |
| 대구경북 | -0.72* (0.32) | -0.89* (0.39) | -0.18 (0.36) | -0.68** (0.25) |
| 부산울산경남 | -0.52* (0.26) | -0.84** (0.32) | -0.32 (0.29) | -0.06 (0.19) |
| 호남 | 2.88** (0.74) | 2.23** (0.77) | -0.65* (0.30) | 1.74** (0.30) |
| 충청 | -0.35 (0.32) | 0.01 (0.35) | 0.35 (0.28) | 0.16 (0.22) |
| 상수 | 5.08** (0.80) | 2.48** (0.90) | -2.60** (0.68) | -0.44 (0.50) |
| N | 958 | | | 951 |
| Pseudo-R ² | 0.13 | | | 0.07 |

주: * p<0.05, ** p<0.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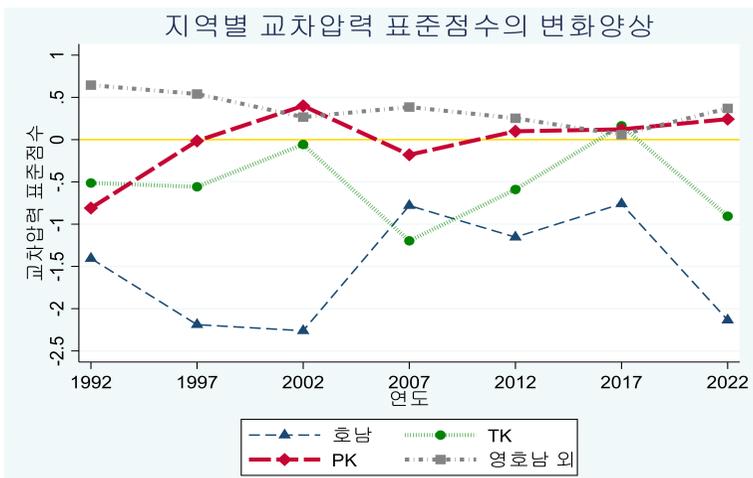
7회의 대통령 선거 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집단 중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주지역과 연령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교차압력 분석으로 더 구체적인 집단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유권자들의 거주지역을 호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 영호남 외 지역으로 나눠서 교차압력 표준점수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압력 점수를 표준화했기 때문에 전국의 교차압력 점수 평균은 0이며, 표준점수의 단위는 교차압력의 표준편차 단위이다. 예를 들어, 교차압력 표준점수가 1이라는 것은 전국의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분포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의 교차압력 점수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계속 가장 낮아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가장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제17~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차압력을 보였으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제15~16대 대통령 선거 수준으로 교차압력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상 떨어져 있는 정도로 교차압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최근 한국정치의 양극화로 인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역대 최다 표차 압승으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교차압력이 높아져서 대구·경북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교차압력을 유지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급격히 교차압력 수준이 낮아진 것은 최근 한국정치의 양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교차압력 수준은 호남 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차압력을 나타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교차압력 점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영호남 이외 지역의 교차압력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인데, 회귀분석 결과 해석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한 특별한 선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교차압력 수준도 다른 선거와 달랐으며,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교차압력 수준이 역대 가장 낮았던 제17대 대통령 선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영향을 받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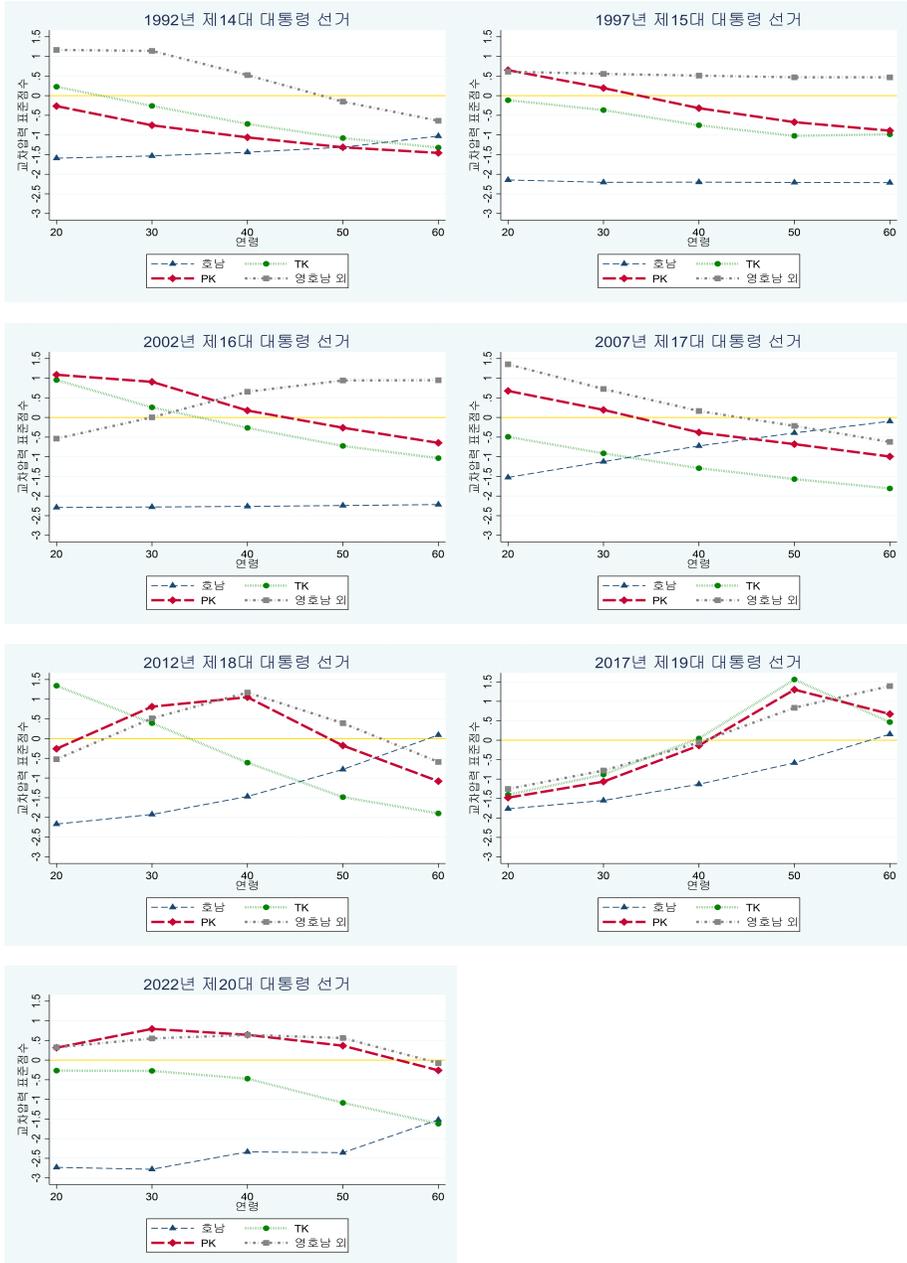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살펴보면,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래로 이 지역의 교차압력 수준은 호남, 대구·경북 지역과는 달리 전국 평균의 수준에서 변동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대구·경북 지역과 교차압력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고 제17대 대통령 선거까지 교차압력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구·경북 지역보다는 영호남 이외 지역과 비슷한 교차압력 수준과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교차압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영호남 이외 지역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이것은 영남 지역균열이 이제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호남 이외 지역과 투표성향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연령별 교차압력 표준점수의 지역별 비교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지역별 교차압력 표준점수의 변화양상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령별 교차압력 수준이 각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교차압력 패턴이 서로 반대 방향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고려하면, 호남 지역의 진보적 성향과 20대의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어 호남 지역 20대 유권자의 경우 교차압력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호남 지역의 진보적 성향과 60대 이상 연령의 보수적 성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서 교차압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호남 지역 유권자의 연령별 교차압력 그래프는 우상향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대구·경북 지역의 보수적 성향과 20대의 진보적 성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서 교차압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대구·경북 지역의 보수적 성향과 60대 이상 연령의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어 교차압력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의 연령별 교차압력 그래프는 우하향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호남 지역의 경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대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림 1]에서 교차압력 수준이 가장 낮았던 시기인 제15~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령별 교차압력 수준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호남 지역의 전 연령대에 걸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매우 확고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와 30대 유권자의 경우에 교차압력 표준점수가 -2.7로 나타나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연령효과로 인해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상대적 약화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나타났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 강화가 호남 지역의 20대, 30대 유권자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교차압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의 40대, 50대 유권자들의 교차압력 수준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20대와 30대 유권자의 경우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도 교차압력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림 2] 연령별 교차압력 표준점수의 지역별 비교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대로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보수 유권자들의 교차압력 수준이 높아서 모든 지역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차압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50대의 교차압력 수준이 가장 높고 60대의 교차압력 수준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영남 지역의 50대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에서 가장 갈등이 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50대 유권자의 경우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차압력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60대 유권자들의 교차압력 표준점수도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연령별 교차압력 패턴을 살펴보면, 제17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대구·경북 지역과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영호남 이외 지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해서 대구·경북 지역도 기존과 전혀 다른 패턴이며 다른 지역들도 60대 유권자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투표행태가 일시적으로 흐트러졌다고 해석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연령별 교차압력 양상이 다시 영호남 이외 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대구·경북 지역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연령별 교차압력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수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균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교차압력의 양상으로 볼 때,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영호남 이외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슈의 특수성으로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과 투표성향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교차압력 개념을 매개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차압력의 측정방법으로서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 교차압력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영남 지역균열의 축소와 변화양상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균열은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음을 재확인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교차압력 표준점수의 양상이나 연령별 패턴으로 볼 때 영호남 이외 지역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대구·경북 지역과는 투표성향의 차이가 확실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수한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대구·경북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래 영호남 이외 지역과 비슷해졌지만 정당의 재편성(realignment)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분석시기의 간격이 5년이라 장기간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1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권자 투표성향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증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거의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세 종류의 선거를 조합하면 1~2년 간격으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석시기의 간격을 좁히고 변화양상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양당체제와 더불어

정당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 전체에서 12%를 넘는 득표율을 보여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도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정하면, 지역균열은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되었을 지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지역별, 연령별 교차압력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다시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당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지역의 교차압력 표준점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회귀한 점에서 확인된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도 역대 가장 낮았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교차압력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현재의 정당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a. “16대 대선과 세대.” 김세균 편.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157-17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원택. 2003b.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1집 1호: 171-193.
- 강원택. 2019. “정당 지지의 재편성과 지역주의의 변화: 영남 지역의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집 2호: 5-27.
- 김석호·박바름·하현주. 2013. “사회연결망 특성이 후보 선택시기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375-402. 파주: 나남.
- 노환희·송정민. 2013.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139-184. 파주: 나남.
- 류지영·윤광일. 2018. “한국사회 정치균열의 변화: 2005년, 2010년 및 2015년 조사결과 비교.” 『선거연구』 1집 9호: 5-28.
- 박원호. 2018. “지방선거와 정당 재편성.” 『EAI 논평』, 1-6.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193-248. 서울: 생각의나무.
- 윤광일. 2013a. “지역주의 투표.”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75-109. 파주: 나남.
- 윤광일. 2013b. “지역주의와 정치적 선호.”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47-7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윤광일. 2018.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한국정

- 치연구』 27집 1호: 241-280.
- 윤광일. 2020.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한국선거학회 편. 『한국의 선거 8: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동시지방선거』, 53-88. 서울: 오름.
- 윤지성. 2017. “교차압력과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제14~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집 3호: 5-45.
- 윤지성. 2019. “제7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영호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교차압력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편. 『민주주의의 두 얼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유권자,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 157-179. 서울: 푸른길.
- 윤지성.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정연구』 26집 2호: 6-33.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내영. 2011. “6·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이내영·임성학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179-200.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요인이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와 구성효과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101-131.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승찬·이현우. 2020. “교차압력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 지역주의와 세대의 영향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30집 1호: 25-52.
- 이재묵. 2022.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변화와 지속.” 강원택 편.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 정권심판론, 세대 갈등, 사회 양극화』, 164-18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임성학. 2011. “지역주의 분열의 완화 가능성은?” 이내영·임성학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201-220.

-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임성학. 2017.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 가능성.” 강원택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촛불집회, 탄핵 정국 그리고 19대 대통령선거』, 135-159.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장은영·엄기홍. 2017. “한국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7집 1호: 1-20.
- 정재도·이재묵. 2018.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집 4호: 59-92.
- 조기숙. 2020. “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와 기제: 세대교체, 전환, 혹은 동원?” 『한국정당학회보』 19집 2호: 63-100.
- 차재권. 2020. “기울어진 운동장은 펴지고 있는가?: 제20대 총선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0집 2호: 19-54.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 한국선거학회. 2011.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 Berelson, Bernard R., William N. McPhee, and Paul F. Lazarsfeld.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der, Ted, Joshua A. Tucker, and Andrew Therriault. 2014. “Cross Pressure Scores: An Individual-Level Measure of Cumulative Partisan Pressures Arising from Social Group Memberships.” *Political Behavior* 36(1): 23-51.
- Huckfeldt, Robert, Paul E. Johnson, and John D. Sprague. 2004. *Political Disagreement: The Survival of Diverse Opinions within Communication Networ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ckfeldt, Robert, and John D. Sprague. 1995. *Citizens, Politics, and Social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fluence in an Election Campa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rd R.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 Mutz, Diana C. 2002a.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838-855.
- Mutz, Diana C. 2002b.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설문조사 데이터 출처〉

- 한국선거연구회. 1992. 『제14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산출기관: 현대리서치.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한국선거연구회.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산출기관: 트렌드리서치.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산출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동아시아연구원. 2007. 『2007 대선패널조사』. 자료산출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0년. 자료번호: A1-2007-0092.
- 이내영. 2012.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자료산출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제

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자료번호:
A1-2012-0212.

동아시아연구원. 2017. 『2017년 EAI 대선패널조사』. 자료산출기관: 한국리서치.
자료제공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공개년도: 2017년.

동아시아연구원. 2022. 『2022년 EAI 대선패널조사』. 자료산출기관: 한국리서치.
자료제공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공개년도: 2022년.

Has Regional Voting Changed?: Evidence from the 14th~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Jisung Yoon*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changes in regional voting over the 30 years since democratization, from the 14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92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22, by using cross-pressure standard scores through time-series comparison. 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d vote choices were age and residential area, and it was confirmed that regional cleavages were reduced from the Honam and Yeongnam regions to the Honam and Daegu-Gyeongbuk regions. In addition, the voting propensity of voters in Busan-Ulsan-Gyeongnam region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voters in regions other than Yeongnam and Honam regions, suggesting that they are in a very flexible state.

Keywords: Regional Voting, Regional Cleavage, Presidential Election, Cross-Pressure Score

투고일: 2023.02.17.

심사일: 2023.02.21.

게재확정일: 2023.03.08.

* Assistant Professor, DGIST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3.3.8.1.27>**【연구논문】****지역기반 시민옹호사업의 참여 및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남지현** · 전지혜***

논문요약

시민옹호는 '자기결정에 기반한 장애인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기존의 복지 지원체계인 사례관리와 다른 맥락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일상적 삶에서의 옹호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내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장애인의 권익이 개별적 상황속에서 옹호되도록 하는 시민옹호사업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비장애인, 사업 운영자의 참여 및 실천 경험을 살펴보고, 장애인복지현장에 어떤 변화와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은 '자기 성장', '타인과의 관계형성', '사회적 자본의 확장' 등을 경험하였고 비장애인은 '장애 인식개선', '권익 및 옹호 관심의 확장' 등을 경험하였다. 사업 운영자들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발견', '마을 공동체 중심의 옹호', '지역 조직화의 한계'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는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삶의 실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민조직화, 인권 감수성 및 권리성, 지속적인 시민옹호사업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지역주민으로서 장애인이 지역내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주체화 되는 과정을 옹호과정으로 도식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복지현장에서 본 시민옹호사업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시민옹호, 장애인복지, 사회적 관계망,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복지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생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장애인이 지역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립생활 지원의 핵심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 자기결정 기반의 삶의 방식,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원과 조력, 가족과 친구 및 조력자 등의 삶의 관계가 필요하다(전지혜 2018).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론가들은 정상화 이론, 사회통합, 자립생활, 커뮤니티 케어 등의 다양한 개념을 논의하였으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김용득·김진우 1999).

특히,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위해서,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의 지역 내 빈곤, 고립, 차별의 문제 역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과 중요성은 입증되었다(김용득 2018, 김윤정·이영란 2018, 심경순·차태영 2019). 즉, 비장애인 중심의 주류사회로부터 장애인이 소외되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소외가 아닌 ‘함께’ 또는 ‘관계형성’을 통해 변화될 수도 있기에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친구이자 이웃, 지지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웃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내 활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 권익이 침해되거나 차별을 당할 때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옹호해 나가면서 권익을 지킬수도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내 누군가와 신뢰관계가 있다면, 사소하게는 외로움, 긴급 상황, 집안일, 약복용, 일상생활 문제 등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옹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내 신뢰 관계를 맺은 누군가가 있다면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은 배제나 소외 상태가 아닌 일상적 삶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다(DiGennaro et al 2014).

이러한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위한 관계맺음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역내 사회통합에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전의 복지서비스 내용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실제로,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처럼 현금 지원형 서비스도 중요하

지만, 사회 적응, 통합문화, 사회교육 등 지역과 연계되는 지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박정민 2020). 즉, 정부주도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실천영역에서도 서비스 지원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의 인적 관계와 지역 활동 및 참여 자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지역기반 복지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옹심이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기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인천과 장애인복지관협회 주도의 전국적 차원에서는 시민옹호인 사업으로 명칭은 달랐으나, 시민옹호사업이라는 이름의 장애인의 지역내 관계맺기 사업이 최근 몇 년간 확산되고 있다.

시민옹호란, 시민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함성기·이수진 2018, 전지혜·이세희 2019, Brimer 2007). 장애 영역에서 시민옹호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울펜스버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능한 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Wolfensberger 1972). 시민옹호를 통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개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민옹호인과 장애인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장애인의 억압, 차별,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여 문제 상황을 함께 돌파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장애인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민옹호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원 패러다임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지원 패러다임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지원해 왔었다. 반면에,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을 옹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 존중과 권익옹호를 동시에 수행한다(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 시민옹호사업의 등장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체계는 지역 기반의 옹호와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차별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원으로 나아가는 실천 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 시민옹호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옹호사업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사업으로 이행되면서 사업운영매뉴얼이나 성과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지

만 연구논문으로서 시민옹호사업의 의미나 참여경험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을 개별적으로 옹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옹호의 과정을 정리한 연구는 없다. 또한 사업운영 측면에서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어떻게 옹호를 경험하고, 시민옹호사업을 통해 어떻게 장애인이 의미있는 활동과 관계를 지역속에서 맺어가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시민옹호인의 역할인식을 분석한 연구(전지혜·이세희 2019)와 시민옹호사업의 운영 사례와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가 소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이 강조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과 밀접한 옹호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옹호사업의 참여자 및 사업운영자의 참여 경험을 분석하여, 시민옹호를 통한 장애인 옹호과정을 체계화하여 드러내고, 향후 필요한 지원 및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옹호사업을 3년간 이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여러 장애인 복지관이 협력하여 2018년도부터 시민옹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 성과 평가 및 사업확대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기반의 옹호체계를 마련하고 있기에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함께 고려하여 지역기반의 장애인 지원 방안을 정책적, 실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시민옹호의 개념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시민옹호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시민과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람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이다(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 시민옹호는 미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익옹호 서비스라 할 수 있다(Bateman 1995). 시민옹호인과 이용자는 일대일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로서 성장해나간다. 일반시민들이 옹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옹호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을 받기도 한다.

시민옹호인은 이용자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훼손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며, 이용자가 지역 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학습하고 공유하기도 한다(전지혜·이세희 2019).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옹호는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지기관 종사자나 부모가 장애인의 옷차림에 억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시민옹호인은 장애인의 생각을 이해하여 시설종사자나 부모에게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 이러한 사례처럼 시민옹호활동은 주로 일상적인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일상적 삶에서 사소하게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개입함으로써 장애인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시민옹호인이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 옹호활동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복지 지원 체계인 사례관리와 비슷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는 일상적 옹호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종합사정하고 그 결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시민옹호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 위협, 피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으로 사례관리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복지전문가와 장애인이용자 사이에 제3의 조력자로서 시민이 있다는 차별성도 크다.

또한, 시민옹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활동지원사, 동료상담사 등이 있는데 활동지원사는 고용관계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에 따른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동료상담사는 동료관계로서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의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직장생활, 정서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활동이다. 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관계라 할 수 있고 동료상담사는 심리적 지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동료관계라 할 수 있다(함성기·이수진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옹호인은 장애인의 심리를 지원하는 동료관계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 존엄성, 사회적 수용 등을 개선하는 자로서 바라볼 수 있다(Brien·Wolfensberger 1980).

2. 시민옹호사업의 필요성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옹호기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함성기·이수진 2018), 주로 학대 및 성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에 개입하기에, 일상적 삶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옹호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친구나 동료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옹호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 내 장애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민옹호인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복지관이 신뢰할만한 이웃을 옹호인으로 양성하여 장애인과 일대일로 매칭을 하고, 개별적으로 사적 관계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어나가게 하고 있다. 일주일 또는 이주에 한번씩 만나서 삶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옹호 이슈가 있으면 대변자가 되고, 일상생활속에서는 신뢰하는 사회적 지지체로 상시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사람은 서로의 바람에 근거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비를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현재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다소 활동내용이나 만남의 횟수,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특성 등의 상이하나, 지역의 관계를 일대일로 맺고 일상적 옹호를 수행한다는 설정은 대부분 동일하다.

전지혜·이세희(2019)의 연구에서 시민옹호사업은 2016년에 과천시와 인천시에서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8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5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민옹호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역 기반의 장애인 옹호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는데,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유형의 장애인도 사회적 관계망 확장 측면에서 옹호가 필요함에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는 전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년간 여러 장애인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전체적인 시민옹호의 심화 및 변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수행된 9개 복지관의 시민옹호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옹호사업의 중요성과 그 영역이 실천영역에서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민옹호사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복지관의 옹호지원의 확장을 위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김용득·김동기·이동석·전지혜·김효정 2019)가 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관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옹호나 복지관의 역할, 학대피해 등에 대한 옹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일상에서의 옹호활동을 분석한 연구라 하기는 어렵다(전선영 2004). 한편, 발달장애인 옹호경험이 있는 시민옹호인의 역할인식을 분석한 연구(전지혜·이세희 2019)에서는 옹호인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장애인 당사자와 사업 운영자의 경험과 인식은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옹호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한계도 있기에 본 논문과는 다르다.

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옹호 경험을 지적장애인의 가족과 사회 복지사를 인터뷰하면서 살펴본 연구(Amanda et al 2018)나, 학습장애인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옹호에게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Jankson 2016) 등이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는 시민옹호가 장애인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명시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통해 시민옹호인의 성과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민옹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기 보다는 사업의 확장 가능성 논의에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보다는 비장애인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 대상이 주로 지적장애인, 학습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옹호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옹호사업의 과정을 알아보고, 의의와 확장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장애인 복지영역에 새로운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역기반의 장애인의 일상적 삶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역에서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적 삶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상적 삶과 옹호사업의 정당성 및 명분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옹호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경험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경험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현상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어떠한 옹호들이 필요한지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복지재단의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비장애인, 사업 운영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시민옹호사업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서면조사²⁾를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모집을 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 참여자 3명, 비장애인 참여자 6명, 사업 운영자 9명이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 시 시민옹호사업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운영기관마다 추천을 받는 식으로 의도적 표집이 진행되었다. 시민옹호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장애 특성, 참여 기간, 성별 등의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2) 대면조사에 참여하였던 2명의 사업 운영자의 경험만으로는 서울시 내 장애인 관련 기관이 운영 중인 시민옹호인 사업의 특성을 하나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7명의 사업 운영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조사시, '기관의 사업 내용', '사업 진행 시 겪는 한계와 의의'와 같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나 사업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가 조사 내용은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하였고, 사업운영자 간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서면조사시에 시민옹호인 사업 참여로 인한 참여자 간 변화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대면조사에 참여한 2명의 사업운영자의 결과를 보충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않았다. 코로나 확산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제 FGI 참여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7명의 서면조사 참여자와 11명의 대면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통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수를 대개 4명에서 11명 정도를 권장하기에 (Patton 1990, 김영천 2016)³⁾, 적합한 표본의 수라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者 특성

| 구분 | 특성 | | |
|-----------|----|--|---------------------|
| 사업 운영자 | 1 | - N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3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6명, 비장애인 16명 | 대면 및 서면 조사 |
| | 2 | - D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2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4명, 비장애인 32명 | |
| | 3 | - S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2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2명, 비장애인 10명 | 서면 조사 |
| | 4 | - S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2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3명, 비장애인 38명 | |
| | 5 | - W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1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2명, 비장애인 22명 | |
| | 6 | - K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1년 동안 운영하였음 | |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수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연구 주제나 질문의 범위가 자명할수록 표본 크기가 작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다(Morse, 2000). 본 연구의 주제는 시민옹호인 사업의 참여 경험이며, 질문 범위는 '시민옹호인 사업 참여 및 운영 경험'으로 비교적 한정적이라 판단하여 기존 연구 참여자의 수를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참여자 수(4명~11명) 11명으로 한정하였다. 추가 대면조사 시행으로 인해 최종 연구참여者 수는 18명으로 확정되었다.

| 구분 | | 특성 | |
|----------|---|---|-------|
| | 7 |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5명, 비장애인 13명 - N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2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6명, 비장애인 36명 | |
| | 8 | - S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1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5명, 비장애인 19명 | |
| | 9 | - S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을 1년 동안 운영하였음 - 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 11명, 비장애인 16명 | |
| 장애인 참여자 | A | -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시민옹호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함 | 대면 조사 |
| | B | - 30대 여성, 지적장애인, 시민옹호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함 | |
| | C | - 50대 여성, 뇌병변장애인, 시민옹호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함 | |
| 비장애인 참여자 | D | - 20대 여성, 대학생, 지적장애인(20대, 여성)과 함께 참여한 지 두 달됨 | 대면 조사 |
| | E | - 60세 여성, 활동지원사, 지적·언어장애인(50대, 여성)과 함께 1년 동안 참여함 | |
| | F | - 60대 여성, S장애인복지관에서 뇌졸중 환자(60대, 남성)와 함께 2년 동안 참여함 | |
| | G | - 시민옹호활동가인 10대 자녀 대신 참여한 어머니, 자녀와 함께 2년 동안 참여함 | |
| | H | - 60대 여성, K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60대, 여성)과 함께 3년 동안 참여함 | |
| | I | - 60대 여성, 참여자 C와 함께 2년 동안 참여함 |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면 및 서면 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이다. 분석자료는 서울복지재단(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IRB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 원자료는 2020년 서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로,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사업 운영자를 모집하여 대면(FGI)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질적연구에서 이차자료의 활용은 해석 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원자료의 수집자와 본 연구의 분석자는 동일인으로, 인터뷰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2차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서면 조사는 2020년 3월 20일~ 4월 1일, FGI는 7월 13일 ~ 7월 22일 동안 진행되었다. 대면 및 서면 조사는 모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반구조화된 대면 및 서면 질문지

| 구분 | | 질문 내용 |
|----------|----|--|
| 장애인 참여자 | | - 사업 참여 계기, 주요 활동 및 일상생활 내용, 사업 참여 이후 생긴 변화 및 좋은 점 등 |
| 비장애인 참여자 | | - 사업 참여 계기, 사업 주요 활동 내용, 사업 참여 이후 나에게/장애인 당사자에게 생긴 변화, 향후 계획 및 필요한 지원 등 |
| 사업 운영자 | 대면 | - 사업 시작 계기, 예상했던 성과 및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 활동 이후 발견된 경험의 확장과 관련 사례 공유, 사업 진행하면서 발생한 권익옹호 개념의 변화, 사업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 필요한 지원, 향후 시민옹호사업 계획 등 |
| | 서면 | - 각 기관의 사업 내용, 사업 별 도출된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의 변화, 사업 별 도출된 지역사회 및 기관의 변화, 사업 진행 시 겪은 한계와 의의 |

연구방법은 주제별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수집한 자료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패턴과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김인숙 2016)으로,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제분석이 매우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주제별 분석법 진행을 위하여 그룹별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느낌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분석법 중 주제별 약호화(coding) 분류법이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방대한 분석 자료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연구자가 줄여나갔다. 약호화 분류법은 참여자들의 진술을 특정 주제나 용어로 범주화시키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의미있는 함축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최윤정·박소영·김주희, 2019). 이에, 본 연구는 전사 내용 중 주제에 따른 의미 관계를 도출하여 반복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이후 연구 결과는 장애인 참여자, 비장애인 참여자, 사업 운영자 각각 기술하였다.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경험한 것과 느낀 점이 다를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운영자들의 질문 내용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여자들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간 분석을 다르게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가 각각 느낀 시민옹호사업의 효과, 자신의 변화 등은 다를 것이다. 또한, 사업 운영자가 인식한 시민옹호사업의 개선 방안과 의의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간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참여자, 비장애인 참여자, 사업 운영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시민옹호사업의 참여 경험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자의 사업 참여 동기와 느낌을 물어보았으며, 사업 참여 전과 후 발견한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장애인의 참여 경험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

전과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 성공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사업 담당자가 바라보는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들의 변화 모습과 한계점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 참여자

장애인 참여자의 시민옹호사업 참여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 과정에서 느낀 점들과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 시민옹호사업은 비장애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장애인 참여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고민을 옹호인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옹호인과 함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단비와도 같은 시민옹호사업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3〉 장애인 참여자의 시민옹호사업 참여 경험 분석

| 주제 | 하위주제 |
|-------------------------|---|
| 긍정적으로 변한 내 모습 | - 이전보다 더 밝아진 나 -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 |
| 너와 나, 우리가 모여 발생한 시너지 | - 서로를 보듬었을 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음 - 새로운 관계의 확장 |
| 미래의 우리를 위한 단비 | - 장애인 권리의 관심 확장 - 더 나은 우리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확장 |

1) 긍정적으로 변한 내 모습

① 이전보다 더 밝아진 나

장애인 참여자들이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본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 중 대다수는 활동지원인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활동지원인은 자신이 못하는 활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기에 조금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에, 시민옹호사업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간관계는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가족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한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그냥 (시민옹호사업에 참여) 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옹호인) 좋아요. 같이 하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장애인 참여자, A]

어, 밝아졌어요. [장애인 참여자, B]

좀 어딘가 모르게 쓸쓸했거든요. 제가 제 마음이. 근데 (시민옹호사업) 활동하면서 이 분(옹호인)을 만나니까 친근감이 생기고 좀 제 자신이 든든하고... (생략)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장애인 참여자, C]

②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밝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듯한 느낌이 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고민있는 거 말하고... 회사에서 뭐가 힘들니 물어보면 말하고... 좋아요. 해결되진 않지만 내마음이... 선생님이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인 참여자, B]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의지가 됐어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생략) 이야기 나누고 서로 고민거리 털어놓고... [장애인 참여자, C]

2) 너와 나, 우리가 모여 발생한 시너지

① 서로를 보듬었을 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음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더 많은 기회의 확장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접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부 가끔 (같이) 해요. [장애인 참여자, B]

(시민옹호인)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딘가 모르게 든든하면서 좀 제가 못하는 거... 해주시는 거 세상 밖에 얘기를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참여자, C]

② 새로운 관계의 확장

새로운 관계라 함은, 단순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관계를 넘어, 그들의 가족과 친구까지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 개인의 친구와 가족들을 알게 되면서 일대일의 관계가 다대다의 관계로 확장된다. 특히 장애인 참여자 D의 경우, 시민옹호인과의 일대일 관계를 넘어 시민옹호인의 지인인 또 다른 시민옹호사업 참여자의 관계까지 확장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관계로의 확장은 장애인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같이 (보드게임을) 해요. 이모 형(시민옹호인의 자녀들) 같이 좋아요.

[장애인 참여자, A]

셋이 만나요. (시민옹호인)선생님이랑 같이. [장애인 참여자, B]

3) 미래의 우리를 위한 대비

① 장애인 권리의 관심 확장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장애인 참여자와 함께 활동하면서부터였다. 장애인이 자신의 고민을 비장애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활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자는 자신의 권리에 직면하게 된다.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와 관련된 지원이나 법 제도를 살펴보고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을 알게 되기도 한다.

장애인 수급자.. (생략) 알아보고 1급이 80 받고, 2급이 30 장애차별...
법이 왜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생략) 그리고 장애인 차별 없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알아보고 있고...
[장애인 참여자, B]

② 더 나은 우리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확장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 참여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이 지금보다 확장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관계 형성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장애인분들이 시민옹호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서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생략)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삶의 기쁨을 해
결하는 거고 시민옹호는 이걸 약간 업그레이드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장애인 참여자, C]

2. 비장애인 참여자

비장애인 참여자가 경험한 시민옹호사업을 살펴보면, 장애 인식,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이해, 장애인 인권 의식, 장애인 포용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 참여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하였음을 인지하였다. 특히 장애인 참여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장애인 인권과 옹호 및 권리보장에 관심이 생겼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참여자들을 제2의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포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표 4〉 비장애인 참여자의 시민옹호사업 참여 경험 분석

| 주제 | 하위주제 |
|--------------------------------|---|
| 행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움 | - 그저 같이 어울릴 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 - 소소한 표현에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
| 한 사람이 바꾸는 다른 한 사람의 세상 | -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 형성 -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리 |
|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옹호 | -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확장되는 관계 -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 장애인 옹호와 권리보장에 관심이 생김 |
| ‘옹호’, 답이 없는 길이지만 같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 - 너와 나, 제2의 가족을 만들 -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옹호 활동을 하고 싶음 |

1) 행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움

① 그저 같이 어울릴 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면서 그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비장애 참여자 G의 경우,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생략)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았었어요.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면서 힘들어도 행복을 느끼면 이제 인생을 이 길이다, 라는 거를 굳이 경제적인 여건으로만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생략) 같이 활동, 어울림에 또 행복이 있다, 라는 거는 더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비장애인 참여자, G]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옹호)교육을 받아봤는데 너무 보람된 일이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비장애인 참여자, E]

② 소소한 표현에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비장애인 참여자들이 시민옹호사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 짧게 이야기하는 장애인 참여자들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일상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장애인 참여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비장애 참여자들은 깊은 만족을 느꼈다고 한다. 혹은 더 나아가 우울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예전에는 단답형으로 대답만하고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됐다면, 간단한 의사소통같은것도 하시고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상태도 좋아지고... (생략) 너무 보람있고 감사하고.. [비장애인 참여자, E]

제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C를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선생님 만나서 행복해요.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우울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 들고. [비장애인 참여자, I]

2) 한 사람이 바꾸는 다른 한 사람의 세상

①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 형성

비장애인 참여자들이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변에 또 다른 지인들이 시민 옹호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사업의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참여자들을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경험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오늘 뭐 해', '오늘 시민옹호 활동하러 나가' 그럼 개는 '그게 뭘데?' 이렇게 되잖 아요. 지금 한 10명 넘게 친구들한테 그런 걸 이야기 했거든요.

[비장애인 참여자, D]

복지관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행사가 있는데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장애인 참여자의) 엄마가 데리고 가라고 하면 그 (비장애인 참여자의)친 구랑 셋이 노는 거야. (생략)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또 소개해주고...

[비장애인 참여자, E]

②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리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 참여자들을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원하고 있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시민 옹호사업의 지원금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사비를 사용하는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뛰어 넘어,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저는 딱히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맘은 크게 없었는데 그런 쪽을 많이 기운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싶고. [비장애인 참여자, E]

이제 약간 가정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또래친구들이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만화카페 가거나 맛있는 것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원해서 제가 그냥 친구 만나듯이...

[비장애인 참여자, D]

3)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옹호’

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확장되는 관계

비장애인 참여자들이 장애인 참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도 언젠가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곱씹어보면서 옹호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옹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있어 장애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옹호해주는 거잖아요. 힘들어 있을 때 거리낌없이 손을 뻗쳐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런 힘들어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스스로없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비장애인 참여자, G]

②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여기서의 도움은 단순히 물리적, 경제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활동을 한다거나 장애인의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로 원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 I의 경우, 장애인 참여자가 가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도 제 주변인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저도 사실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이제 뭔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장애인 참여자, D]

실질적으로 (장애인 참여자의) 재능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발휘를 못하는 거 같았어요. (생략) 제가 지역 단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나 구에서 사업성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데를 (테려다 장애인 참여자들) 거기다 참여를 시켰어요. [비장애인 참여자, I]

③ 장애인 옹호와 권리보장에 관심이 생김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 참여자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옹호와 권리보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잘못된 사회환경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민옹호인으로서 저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뭐 할거냐고 먼저 물어보고.. A가 원하는 거 하고 밥도 마찬가지로, 식사할 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제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에게 맞춰줘요.

[비장애인 참여자, I]

4) ‘옹호’, 답이 없는 길이지만 같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① 너와 나, 제2의 가족을 만들

시민옹호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아마, ‘제2의 가족의 탄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 참여자의 가족과 장애인 참여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옹호의 범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옹호 활동은 명확한 답이 없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제2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옹호하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대일 활동하고 보고서 제출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1년에 2번만이라도 우리 시민옹호인 가족들끼리 다모여... [비장애인 참여자, G]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됐었고 그리고 이 친구(장애인 참여자)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막내라고 하거든요.

[비장애인 참여자, I]

②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옹호 활동을 하고 싶음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옹호 활동의 확장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과 장애인 참여자를 매칭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시간과 자본,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옹호활동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자원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연계 활동을 통해 옹호사업의 규모 또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가 구연동화 하는 사람들끼리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게 있다. 라고해서 (장애인들을) 매칭하는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 참여자, H]*

3. 사업 운영자

사업 운영자가 경험한 시민옹호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운영자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찰자로서의 경험과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겪었다. 우선, 관찰자로서의 경험은 시민옹호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의 이웃 관계와 삶의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과 장소가 연결되면서 장애인 당사자는 지역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지 제도의 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사업 운영자들은 이야기하였다.

운영자로서의 경험은 시민옹호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한 점이다. 사업 운영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이 사각지대 장애인의 발굴, 옹호개념 및 당사자의 개념 확장, 장애인의 역량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이 새로운 개입 방안의 가능성을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옹호사업이 복지영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원의 연계나 다양한 인력 및 경제적 자원의 부족함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표 5〉 사업 운영자의 시민옹호사업 참여 경험 분석

| 분류 | 주제 | 하위주제 |
|---------------|--------------------------------|--|
| 관찰자로 서의 경험 |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징검다리 | -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 - 장애인의 활동 범위 확장 - 일상 속 깊은 관계의 형성 - 좋은 이웃 관계의 확장 |
| | 주체적 삶으로의 변화 | - 나의 감정과 태도, 인식에 관심 - 자기주도적 변화 -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공유 |
| 운영자로 서의 경험 | 복지 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 - 격변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등장 - 당사자라는 개념의 확장 - 옹호 개념의 확장 - 사각지대 재가장애인의 발굴 - 일상생활에서의 옹호활동 |
| | 지역과 함께하는 옹호활동을 위한 관심의 확장 | - 민관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만남의 장 마련 -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 |

1)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징검다리

①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

운영자 B의 경우, 시민옹호사업을 통해 다른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옹호 활동가로 신청을 한 장애인 참여자의 사례를 언급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지역복지 공동체에 대한 관심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즉,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기도 하였다. 시민옹호활동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자기보다 더 불편함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시민옹호사업에 옹호인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업 운영자 2]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불편한 시설에 대해 직접 건의를 하여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 [사업 운영자 7]

② 장애인의 활동 범위 확장

지역복지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전의 막연했던 활동이 나도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구체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다. 시민옹호인과 만나기 전의 장애인 참여자들은 지역 내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옹호인을 만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공간, 다양한 참여,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확장되었고 이는 곧 장애인의 일상적 삶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사전에 시민옹호인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거의 집 아니면 교회, 병원 이렇게 세군 데 밖에 안갔었어요. 근데 옹호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장애인 참여자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업 운영자 2]

③ 일상 속 깊은 관계의 형성

시민옹호사업은 일대일의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일상 속 깊은 관계는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들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일상 속 옹호와도 연계될 수 있다. 시민옹호인은 장애인 참여자의 일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참여자들이 겪는 불편과 환경의 개선점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장애주민이 자녀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민옹호인이 집안을 봤을 때,, 아이가 뭔가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옹호인이 자기 경험을 말해준 경우이긴 해요. 시민옹호인분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혹시 독립공간을 같이 꾸미실 필요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사업 운영자 2]

'한 사람'과의 일상 속 관계에 대한 경험이 마을 속 여러 일에 대한 경험으로 확장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상 속 관계는 가장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주안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자 4]

④ 좋은 이웃 관계의 확장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다양한 이웃을 만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의 가족과도 관계 형성을 하면서 하나의 이웃이 두명, 세명의 이웃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녀분들도 그 친구 그 애 언제오냐고. 애 손가락, 젓가락은 안 놓으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챙기게 되고. 그리고 활동할때도 운동같은 거 할때도

그렇고. 그 아버님까지도 친해져가지고... [사업 운영자 1]

지역주민 및 상점 주인들과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사업 운영자 1]

2) 주체적 삶으로의 변화

① 나의 감정과 태도, 인식에 관심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풍부한 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바로, 감정과 태도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곧,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옹호사업 운영자 B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향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정해나가는 장애인 당사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비장애인 또한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인식은 장애인식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신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옹호인들이 자기가 농구대회 했을 때 응원왔던 게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략) 농구대회를 나가는데 솔직히 혼자 나가가지고 외롭고 힘들 것 같은데 외젼음 좋겠다 해가지고 시민옹호인이 매칭되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옹호인들도 몇 명가서 응원을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사업 운영자 2]

이제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거라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인식을

넘어 태도와 인식, 감정에 대해 살피고 관계해나가는 옹호인이 되셨습니다. [사업 운영자 4]

② 자기주도적 변화

시민옹호사업의 참여자들은 원하는 활동을 직접 계획함으로써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를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체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선호가 생기게 되면서 타인과 논의를 하는 과정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나의 선호와 타인의 의사를 동시에 존중하게 되면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업 참여 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활동 및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미와 관심사가 생기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타인에게도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하였음. [사업 운영자 7]

③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공유

권리라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나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켜본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시민옹호인 분이 말씀하신게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대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 주장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옹호인이 뿌듯했다고 했던 사례예요. [사업 운영자 2]

시민옹호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장애인 인권, 권익침해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 나아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불편한 시설에 대해 직접 건의를 하여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

[사업 운영자 7]

3) 복지 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① 격변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등장

시민옹호사업은 기존 복지사업의 한계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사업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옹호사업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을 직접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지원체계를 둘러싼 복지 환경은 커뮤니티 케어, 개인별 맞춤 복지 지원 등 급격한 지원체계의 등장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옹호사업은 격변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사람중심 패러다임이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복지관이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이 시민 옹호사업과 맞아서...(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자 1]

② 당사자라는 개념의 확장

시민옹호사업은 단순히 비장애인, 장애인의 일대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장애인 당사자라는 개념의 확장과도 연계된다. 일상 속 발생하는 장애인 권리 침해 상황은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일상 속 옹호활동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개입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장애 복지의 개입 대상이 장애 가족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노동자인데 상호 간(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 불신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이에 시민옹호인이 개입하여 소통을 시도함. [사업 운영자 5]

③ 옹호 개념의 확장

시민옹호인 활동은 옹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주로 일상 생활 속 옹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적인 부분에 개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느낀 몇몇의 시민옹호인들은 활동지원사, 공공후견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옹호 활동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가능한 옹호활동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을 의미한다.

원래는 활동지원사분이 아니셨는데 이거를 하면서 활동지원사까지로 연계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민옹호인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활동지원사로도 활동을... [사업 운영자 1]

아까 이모라고 했던 당사자분이 인터뷰 때 후견인 교육을 예전에 받았었고 이제 신청하려고 하고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장애인 참여자)이랑 끝까지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업 운영자 2]

지속가능한 '시민옹호인' 역할에 대해 주민활동가 그룹과 연대하여 장애인권 감수성 맥락에서 마을공동체 속 이식(Duplication)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자 4]

④ 사각지대 재가장애인의 발굴

일상 속 옹호 활동은 일상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발굴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옹호인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데에 매우 유리하다. 운영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민옹호 활동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산되어야 할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이 지금은 그룹홈에 들어가서 살고 제신데 거기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 시민옹호인 분이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잘 지내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또 돈 사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사업 운영자 1]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활비? 이런 것도 알아봐서 이런 지원받는데 있다 해가지고...그런 형식으로 최대한 그 분이 필요할 만한 것을 사전에 알아둔 다음에 이제 장애인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주변에 지인분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청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례들도 있어요. [사업 운영자 2]

⑤ 일상생활에서의 옹호활동

일상생활에서 깊이 형성된 관계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옹호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존의 옹호활동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민옹호사업에서 진행된 옹호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민옹호인분들이 ‘어 이걸 침해상황인거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옹호를 해주고 이게 꼭 기관으로서 뭔가 전문가가 나서서 해주는데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사업 운영자 1]

옹호라는 건 엄청 거창하고 힘든 사례 있을 때의 그 옹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민옹호사업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큰 옹호가 아니라 진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옹호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옹호도 어떻게보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게 아닐까... [사업 운영자 2]

매칭된 당사자의 과중한 핸드폰 요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당사자의 가족과의 면담, 핸드폰 업체 방문을 통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음. 이웃의 제안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상황을 확인하고, 이웃과 당사자와 업체가 삼자대면을 통해 명확한 상황 파악 필요함. [사업 운영자 5]

4) 지역과 함께하는 옹호활동을 위한 관심의 확장

① 민관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시민옹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시민옹호활동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옹호활동의 홍보나 활동에 있어 필요한 편의시설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운영자들은 민간 간 네트워크 형성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시민옹호활동이 더 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사업 운영자들은 민간 자원의 활용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어려웠던 점은 민관협력부분이었던 같아요. (생략)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 타이틀에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편견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나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 운영자 1]

민관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관의 협조가 항상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방문 하여 사업 설명을 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단이 모여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내거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연계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사업 운영자 6]

동주민센터, 구청의 소극적 협조로 불편한 편의시설 찾기를 진행하여도 논의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함. [사업 운영자 7]

②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만남의 장 마련

현재 시민옹호사업은 장애 복지 기관의 협력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참여자를 매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간 동등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옹호인 사업은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포대를 매칭하여 공감되고 지지하는 관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 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사업 운영자 7]

③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

장애인 참여자 및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 비장애인 참여자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여 활동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참여자와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 운영자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은 활동비로 직접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바자회나 민간단체 등을 통한 민간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시민옹호활동은 사실 활동비도 너무 적기도 하고.. 뭔가 활동할때도 그런 데 이제 활동지원까지 하면은 시간도 더 같이 있을 수 있고 풍부해지니까.

[사업 운영자 1]

구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던가 아니면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든가 마찬가지로 바자회 지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진행하긴해요.

[사업 운영자 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비장애인, 사업 운영자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옹호사업의 의의와 성과들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참여자 3명, 비장애인 참여자 6명, 사업 운영자 9명의 참여 경험을 주제어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장애인 참여자의 피옹호인으로서의 경험, 비장애인 참여자의 옹호인으로서의 경험, 운영자의 관찰자 및 운영자로서의 경험으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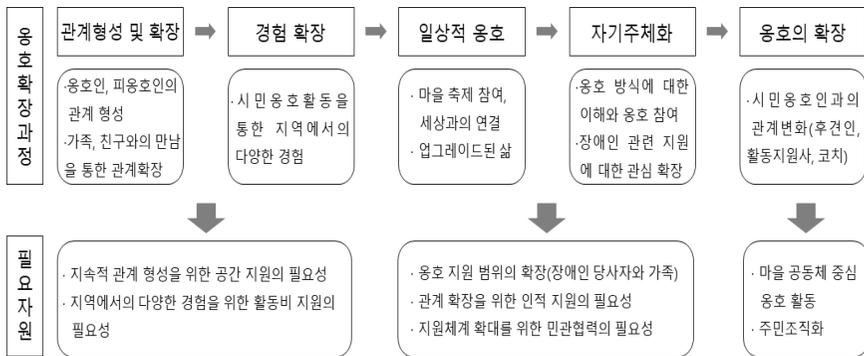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참여자들의 경우, “자기 성장”, “타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자본의 확장” 등을 경험하였다. 나만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자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한 자신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옹호인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터득할 수 있었다. 옹호인과 그들의 가족 및 친구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장애인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더 밝아진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함께하는 활동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의 경우, ‘장애인식 개선’, ‘권익 및 옹호 관심의 확장’ 등을 경험하였다. 특히,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장애 인식을 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 옹호 및 인권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누군가를 옹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나아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옹호를 일상 속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펴본 결과,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 모두에게 ‘양방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용득 외, 2020). 다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참여자들과 비장애인 참여자 간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몇몇 장애인 참여자들이 비장애인 참여자에게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비슷한 경우에는 ‘언니’, ‘~씨’ 등으로 호칭함으로써 동등한 관계에 한발짝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령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운영자들의 경우, 크게 관찰자로서의 경험과 운영자로서의 경험이 도출되었다. 사업 운영자들은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 발생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시민옹호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표현과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이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관찰자

로서의 경험이 대두되었다. 더 나아가, 사업 운영자들이 시민옹호사업의 다양한 효과성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시민옹호사업은 격변하는 복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시민옹호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된 옹호활동으로서 기존의 옹호 사업과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조직화나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정리한 시민옹호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시민옹호의 심화 과정

우선 일대일로 매칭되는 시민옹호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옹호인, 피옹호인으로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과 가족, 옹호인과 피옹호인의 친구 등으로 확장되었다. 일대일의 관계가 다대다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의 확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 기반한 옹호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이들이 자주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활동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관계와 경험의 확장은 장애인이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한

장애인 참여자는 집에서 혼자 보드게임을 했었는데,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옹호인과 옹호인의 가족과 함께 지역 내 보드게임카페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마을 축제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장애인과 세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매개역할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 옹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은 이들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필요한 도움이거나 지원을 연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소소한 옹호는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의식주가 다 갖추어진 삶도 충분한 삶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욕구들이 있기에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및 경험 확장, 일상적 옹호는 장애인의 주체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옹호사업의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옹호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며, 장애와 관련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장애인을 옹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한 장애인 참여자는 다른 장애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피옹호인으로서 시민옹호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옹호사업은 옹호와 장애에 대한 관심 확장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구축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다.

일상적 옹호와 자기주체화의 과정 속에서 옹호 범위의 확장과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대일 관계를 통한 옹호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만을 계속해 나가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전문적 옹호나 관차원의 지원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옹호활동과 장애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옹호활동도 다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옹호활동은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옹호활동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힘을 연계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시민옹호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일대일 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옹호의 범위가 확장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이자 옹호 활동이 되는 시민옹호가 계속되고, 장애인의 자기주체화가 심화되고 지역에서 관계하며 자생하는 역량을 장애인이 가지려면 민관협력 차원의 총합적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옹호와 자기주체화의 과정을 지나서 옹호의 확장이 발생한다. 여기서 옹호의 확장은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옹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옹호인과 피옹호인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적 옹호가 확장되면서 옹호인과 피옹호인의 관계도 변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옹호인으로 활동하다가 피옹호인의 활동지원사도 신청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인천에서 실시한 시민옹호인 사업도 이와 비슷하게 옹호인에서 공공후견인, 주거코치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와 인천의 사례처럼 옹호의 범위가 옹호인과 피옹호인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주거코치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사적 만남이 서로간의 신뢰를 만들고, 공작 지지체계로 변화하는 관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향후 옹호인과 피옹호인의 관계 확장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옹호활동이 또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로 변하기도 하고, 자발적 주체성이 강화되면서 공적 예산 지원 없이도 주민 자치성에 기반한 주민조직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아직 이러한 주민자치형 시민옹호로 발전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업비 없이도 주민간 신뢰관계 속에서 만난 이들이 계속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자발적 주민자치화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일련의 과정과 지원들이 충족되면 장애 친화 마을이나 장애친화 공동체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반영하여 이들의 일상적 삶을 가능하게 한 실천 방식이었다. 시민옹

호인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장애인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논의하면서 일상의 활동내용들을 채워나갔다. 장애인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거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등 자기결정에 기반한 일상적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었다. 접근성이나 지원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장애인이 직접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논의하여 활동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나 사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선호에 기반한 지원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옹호사업의 옹호 내용은 지역과 밀접한 세심한 활동이었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의 지원 내용은 성폭력, 사기, 학대 등 주로 범죄와 관련한 사항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도 매우 분절적이어서(최윤영, 이세희, 2015)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옹호인은 일상적 삶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장애인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자들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공적 옹호체계와 사적 옹호체계 모두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 옹호체계는 범죄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며 사적 옹호체계는 일상적 삶에서의 지원으로 확대해나간다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구제와 옹호체계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전지혜, 이세희, 2019).

셋째,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과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시민옹호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케어가 대두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매우 필수적이다. 지역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음식, 옷 등의 생활필수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과 교류 또한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 포함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확장되는 것은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Rimmerman, 2012). 장애인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확장된 관계를 맺으면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서울복지재단, 2018; 전지혜, 2018), 시민옹호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에서의 관계 형성, 주민

으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가족과 비장애인의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 용이해졌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시민옹호인과 연대하여 지역에서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 주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혹은 장애인 당사자가 시민옹호인의 활동 영역에 포용되면서 장애인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으로 시작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역할 및 활동 영역의 확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민옹호사업의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실천 사업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넷째,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간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앞에서 시민옹호인들은 장애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의 자원 및 프로그램 혹은 사람과의 연계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시민옹호인이 지역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 내 장애인의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민간봉사단체와 장애인을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 시민옹호인의 지인을 장애인에게 소개한다든지 등의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민옹호인은 장애인의 활동범위와 관계 확장을 열정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고군부투에도 불구하고 민간 간의 연대체계 및 정보교류의 기회가 부족하여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많이 모집하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옹호인들은 주민조직화의 방식을 통해 옹호인들 간 만남의 기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였으며, 복지기관 혹은 민간기관 간의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민관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활동 영역과 관계 확장을 위한 민간의 마을 공동체 지향 방식들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다섯째, 시민옹호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인권 감수성 및 권리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옹호인이 장애인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 자기결정권 등 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수적이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네트워크, 민관협력, 관계확장 등도 중요하지만 옹호인의 장애 인식이 낮으면 다양한 지원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동등한 관계에 기반한 옹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 간의 연령 차이가 큰 경우, 장애인 참여자는 비장애인 참여자를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호칭은 옹호인과 피옹호인 간의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옹호인은 피옹호인을 도와주어야 하거나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옹호인이 피옹호인의 친구 혹은 조력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반한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차원의 노력을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매칭할 때에 연령대가 비슷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더 나아가 주로 시민옹호인을 양성하는 장애인 복지관은 시민옹호인에게 옹호의 역할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옹호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 가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속적인 시민옹호사업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동비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업 운영자들은 시민옹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원받고는 있으나 년 단위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활동비 사용에 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활동비가 부족하여 개인의 사비를 활용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 정산 방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활동비 사용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옹호인 양성 과정에서 활동비 사용 방식 및 정산에 관한 부분을 교육할 수도 있으며, 주민자치성을 통한 시민옹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사적 관계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사업비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계와 옹호를 위해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만남 자체가 의미있도록 하는 시민의 자치성과 활동자체의 힘을 키워서 복지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모든 자치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사업이 3년째 지속되었고 인천시에서 사업 효과성을 인정하여 2023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복지재단 또는 장애인복지관 협회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작했으나, 일부 복지관들이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사업이기에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에 사업수행기관 및 재단, 협회 등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온 것이다. 향후에는 본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의 기본사업화 하거나, 시민 자치력에 기반하여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에 기반한 시민옹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비장애인, 사업 운영자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시민옹호사업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케어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적 삶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옹호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활동 경험을 다루지는 못 하였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여러번 취소되었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옹호인 및 피옹호인들은 2-3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영향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다. 향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운영자의 경험과 옹호인 및 피옹호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옹호사업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시민옹호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에서 시민옹호사업의 정의와 장점들을 논의하였으나 시민옹호사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에 많은 한계를 겪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옹호사업을 다룬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의 사례만 검토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민옹호사업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수행되었고,

특히 사업담당자의 경험은 서면조사를 병행하였기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였으나, 시민옹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발견할 수 있었던 효과와 변화들은 연구자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제 38권 3호: 492-520.
- 김용득·김진우. 1999. “장애인복지의 변천과 전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14권 1호: 71-101.
- 김용득·김동기·이동석·전지혜·김효정. 2019.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서비스 사례 연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김용득·이동석·조문순. 2020. 『시민옹호 성과평가와 확산모형 개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김윤정·이영란. 2018.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자립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3호: 755-763.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박정민. 2020.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변화와 추세.” 『보건복지포럼』제281호: 18-30.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윤민화·김경희. 2018.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거주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제12권 1호: 53-79.
- 이동석. 20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제18권: 127-145.
- 서울시복지재단. 2020.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서울복지재단. 2018. “2018년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계획.”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629791>. 2021. 07. 05 접속
- 심경순·차태영. 201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성공 경험에 관한

- 질적 사례분석.”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3권 3호: 5-31.
- 전지혜. 2018. “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지역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사례연구: 장애인의 일상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0호: 209-236.
- 전지혜·이세희. 2019. “시민옹호인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 옹호경험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3호: 112-119.
- 전선영. 2004. “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의 명분 확인 및 이론적 개념 정립.”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제1권 1호: 91-119.
- 최윤영·이세희. 2016.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 모색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3호: 425-449.
- 최윤정·박소영·김주희. 2019. “장애인의 재난 인식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통한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2권 2호: 77-103.
- 함성기·이수진. 2018. 서울복지재단(온라인).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629791>. 2021년 07월 접속.
- Phelan, Amanda, and Emer Meighan. 2018. “Developing citizen advocac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grated Care* 18(52): 1-8.
- Bateman, N. 1995. “Advocacy Skills: A Handbook for Human Service Professionals.” Arena.
- Brimer, Richard W. 2007.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Current Perspectives and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College.
- DiGennaro Reed, Florence D. et al. 2014. “Barriers to Independent Liv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 *Behavior Analysis in Practice* 7(2): 70-77.
- O'Brien, John, and Wolf Wolfensberger. 1980. *CAPE: Standards for Citizen Advocacy Progam Evaluation*. Canadian Associ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 Jackson, R. 2016. “Learning disability and advocacy: obstacles to client

- empowermen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3(1): 50-55.
- Morse, J. M. 2000. “Determining sample siz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1): 3-5.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Sage Publications.
- Rimmerman, Arie. 2013.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A Study on Participation and Practice Experience of Community-Based Citizens Advocacy Projects

Ji Hyun Nam* · Jihye Jeon**

ABSTRACT

Citizen advocacy is defined as 'activiti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is understood to have a different context from case management, which is the existing welfare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as community care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advocacy system in the daily life of the disabled is emerging. This is a civic advocacy project that enables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to build relationships and trust within the community and to advocate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dividual circumstances. is becoming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and practic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non-disabled, and business oper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citizen advocacy project, and to find out what changes and needs were made in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sabled experienced 'self-growth',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expansion of social capital', while non-disabled people experienced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and 'expansion of interests and advocacy interests'. Business operators experienced 'discovery of a new welfare paradigm', 'advocacy centered on the village community', and 'limitation of local organ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s about the realization of daily life center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pport measures for relationship formation, village community-centered resident organiz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right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inuous civic advocacy projects. was discussed. Also, in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the process of forming relationships and trust and becoming a subject of the disabled as a local resident was diagrammed and analyzed as an advocacy process, and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the civic advocacy project in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were discussed.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Disabilities, Citizen Advocacy, Welfare for the Disabled,
Social Relationship, Community Care, Community Welfare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3.3.8.1.77>

【연구경향】

Re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 Focusing on Estimation of Online Public Opinion

Daesik Kim*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a critical issue across the world. Various industries attempt to incorporate technology to adapt and lead the future. People's daily life has changed dramatically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dvance. There is digital evidence of people left untouched in cyberspace because collecting and utilizing the data require specific resources and techniques. This article explains how measuring public opinion has changed and identifies possible difficulties in incorporating emerging technology. Public opinion is a crucial subject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ers use a survey to measure public opinion and seek to utilize new technology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Sentiment analysis is a type of opinion mining that extracts attitudes from texts. Previously the analysis used frequency based on a dictionary and, in recent days, utiliz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e-trained models like BERT. Online public opinion can be measured through this analytical technique.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to handle when researcher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yles of online texts are unique. It is expensive to build a dataset for tra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many other formats of data available besides text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ses challenges. It does not allow researchers to

*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 an algorithm as they do not provide a model like a typical statistical analysis. It also requires significant computing power, which can be unavailable to individual researchers. Nevertheles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a part of our everyday life. It is left to political scientists to utilize the technique to gain deeper insight into political phenomena.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public opinion, sentiment analysis, research methods

I. Introduction

ChatGPT from OpenAI has become the center of interest around the world. It was introduced to people in November 2022 and has gained 100 million users in two months after the official launch, which is fasted among all internet services like Netflix and Twitter (Buchholz 2023; Navkiran 2023). Under this worldwide popularity, South Korean president Seok-yeol Yoon, in his general meeting with government ministries, emphasized ChatGPT and asked for relevant responses from the government to understand and efficiently utilize the technology (Baek 2023). ChatGPT is a chatbot model based on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GPT is another representative algorithm demonstrating superb outcomes in a generation task with BERT (Bidirectional Encoder 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The BERT model has provided significant advancement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example, the algorithm allows us to use a well-performing online translation service. ChatGPT brings another singularity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it creates online services using generation rather than classification. Microsoft,

which invested heavily in creating ChatGPT, attaches the algorithm to its search engine, Bing, and allows people to a particular function of the model in daily life.

It has been a while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ed influencing people's lives. We follow directions from navigation and ask a digital assistant on the phone to make a call. We are now very familiar with the curation of information given by a computer, like Netflix recommends a film based on our previous choices. Shopping sites also generate plausible choices for every user. Although people's life alters gradually and significantly, there is a lack of change in how social science research is performed. Still, the survey is the most frequent data source, and statistical inference is the primary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Weaver (1948) illustrates that research methods have changed per available resources from the environment. Researchers started investigating the two-variable relationship to unorganized complexity, which assumes independence among many variables. It is possible to examine organized complexity where all factors are intertwined with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llows researchers to seek and understand hidden patterns in society. Social science, including politics, is the most complex subject as it handles how people think and behave.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 are critical for future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s its importance and penetrates our everyday life. Various industries attempt to utilize it and expand their capacities. However, in academics, especially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pplication does not match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al accommod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public opinion and its

measurement to provide two implications. First, it introduc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possibility to us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A poll is still the first choice to gauge public opinion. However, people's digital footprints have been gaining importanc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nternet and computing technology. The research explains previous methods used to extract information from online text data 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id future research. Second, the study discerns challenges associated with analyzing online data concerning measuring public opinion and seeks positive possibilitie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echnology is still in rapid progress and can help political science researchers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uzzles with unique perspectives.

II. Literature Review

1. Public Opinion in Politics

Public opinion has long been a prominent topic in politics. Researchers in politics always desire to know what people think or believe because it provides a signal of how democracy is performing. Polls have made it possible to interpret the aggregated attitudes of the public. They have added value to politics by providing technical and organized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politicians, and researchers (Campbell et al. 1980). Public opinion typically means the thoughts, interests, or beliefs of appropriate people in the larger society (Erikson et al. 2002; Stimson 1999). This traditional definition includes a notion that public opinion exists naturally among people and can be discovered. However, there is another interpretation of public

opinion beyond this conventional assertion. According to the alternative perspective, related research forges public opinion (Bourdieu 1979). Compared to the past, more media outlets may affect people's opinions besides the views of experts in the present day. Traditional media channels like radio, television, and new media include online blog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YouTube. This perspective toward public opinion aligns with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where politicians strategically use fabricated information.

People tend to believe that polling results represent the entire population, but this is incorrect (Erikson et al. 2002). They only reveal the aggregated attitudes of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MacDougall (1952) clearly explains the boundaries of public opinion in his writing. Geographical distinctions define the scope of the public, making it clear that multiple publics can exist in the world. For example, counties or states as aggregated units have a pattern to support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In South Korea,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f the country support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A person can have various thoughts depending on an issue. One person can be a part of various interest groups, which, according to MacDougall (1952), are equal to many participating publics. Lastly, people in the same public have a sense of belonging. They share interests, thoughts, and beliefs, which lead them to possess similar attitudes toward a particular issue. These collective views become the public opinion of a targeted population.

Since the definition of public opinion is closely related to survey polls, the previous works of literature indicate there are limitations to polls (Erikson et al. 2002; Herbst 2001; MacDougall 1952, Splichal 2012). Surveys rarely measure a direction and magnitude simultaneously, and

the poll results can differ, which measure the same social issue. This shortcoming happens because a result can be different based on the wording of a question. It is possible to elicit a more positive or negative answer with an intended question. People lack sufficient information on every political issue, which can cause polls to be biased. Although polls use samples to gauge the population, it is impossible to know the actual population, so there is always a risk that poll result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views of the public in question. Public opinion is closely related to issue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There are many studies concerning the saliency of issues. It is possible to group them into two based on the speed of issue evolution (Gonzalez-Balion et al. 2010). One group of studies is about the long-term trends of an issue, observing generations and how perspectives on a subject may change over a long period (Erikson et al. 2002; Page and Shapiro 2010; Stimson 1999). The others focus on short-term volatile factors such as gender gaps and the unpredictability of presidential approval in public opinion (Clarke et al. 2004; Kriner and Schwartz 2009).

The world has dramatically changed while we continue to measure public opinion with the same polling method. The way of gauging public opinion has mostly stayed the same compared to the technologic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our world. The medium of polling has been altered from face-to-face questioning to a telephone survey. This change happened to accommodate changes in people's lifestyles and to accomplish better sampling. The spread of smartphones has altered how people live. Social network services, in particular, have influenced the behavior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People interact differently than before by actively accepting the Internet as a part of their lives. The response rate of a telephone

survey decreases as people use mobile chat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to communicate more than traditional voice connections. Modifying survey methods to incorporate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environment is critical for measuring public opinion in the future.

2. Online Public Opinion and Estimation Approache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affect politics. Politicians use online tool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Presidents Trump and Obama used Twitter extensively. South Korean politicians mainly use Facebook and YouTube. These new media outlets are now a dominant source of communication in politics. The Internet is an essential element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election campaigns. The Obama and Romney presidential campaigns actively utilized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the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Kreiss, 2016). This trend continued in the 2016 and 2020 presidential campaigns involving Trump (Klašnja et al. 2017). Modern election campaigns vigorously appeal to their supporters through various online services. Social networks have gained significance as a medium to facilitate a political movement. Online social outlets have aided many public protests worldwide, from Arab's pro-democracy movement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Lynch 2011; Tucker et al. 2016; Tufeki and Wilson 2012). Although the Internet has deeply penetrated politics, the existing ways to measure public opinion do not incorporate online platforms.

Researchers have considered that online data can help gain greater insight into public opinion. There are two groups of online public opinion studies. The first batch examines the distinctive qualities of online public opinion, explaining the degree to which the Internet

represents the general public. Social network platforms have various groups of users, explaining the peculiar level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general population (Duggan and Brenner 2013). This characteristic applies to other environments. British Twitter and Facebook users are not the direct samples of the general population, not sharing common factors like age, gender, and education level (Mellon and Prosser 2017). Some research illustrates that social networks represent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rath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Eom 2020; Jin and Yang 2015; Lee and Yang 2017). Many previous literatures provide evidence of social media's non-representativeness using Twitter data, indicating its bias toward population, age, gender, race, and income level (Malik et al. 2015; Mislove et al. 2011). Other studies attempt to analyze the political traits of Twitter users. Vaccari et al. (2013) explain that users' political ideology leans toward the left and is more politically engaged in the Italian context. Barberá and Rivero (2014) reveal that users are more politically divided than the general public. Hampton et al. (2011) only consider users with a higher level of political activities and find that women are underrepresented.

The other group of studies investigates political phenomena using online data, emphasizing predicting election results using social media (Franch 2013; Jenson and Anstead 2013; O'Connor et al. 2010; Tumasjan et al. 2011). These studies analyze different variables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an election. A model's predictability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hoice of dependent variables and analytical tools. The performance of a model is measur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value with an actual election outcome. Another area of political interest concerning the use of social media is the area of issue saliency. Similar to the literature on presidential approval, the related

research illustrates how a particular theme influences election results. The studies focus on short-term events such as election debates (Elmer 2013; Shamma et al. 2009) and long-term factors such as economic status (Gonzalez-Bailon et al., 2010); both find that these factors can influence elections and presidential approval.

These studies presented above indicate the interest of researchers in online data as a source for measuring public opinion. Suppose it is possible to process a massive amount of data. In that case, the information from various online outlets, including social networks, can significantly complement existing polling methods to measure public opinion. Currently, many sources are available to collect relevant data, and these online data mines will only grow a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Online data can be more insightful as additional research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se various sources. The opinions of a targeted population become even more evident when we consider both traditional and new methods through collecting information from manufactured and natural environments.

Online data is unstructured. It does not have a form like a traditional survey, which has a question and an answer. Information and noise simultaneously exist in online data. Therefore, applying relevant tools and techniques to extract valuable knowledge is critical, which can be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raditional structured data. There are two approaches to understanding how people think about online digital data (Klasnja et al. 2017). First, there is a counting method. It counts words and uses the frequency of utilized texts to figure out patterns within data. However, results produced from this method are inconsistent. Some studies show successful prediction, and some provide evidence for less predictive power (Tumasjan et al. 2011; Skoric

et al. 2012; Bermingham and Smeaton 2011). Second, sentiment analysis can extract the attitudes of people from online data. This method requires a large computing capacity compared to the simple counting method. Within this method, there are unsupervised and supervised approaches. The unsupervised analysis uses a dictionary with lexicon and sentiment categories. Studies on this method emphasize its stable performance with the availability of a good dictionary, but it has challenging to build a good quality dictionary for general purposes (Alaparathi and Mishra 2021; Dodds et al. 2011; Gonzalez-Bailon et al. 2012; Thelwall 2010; Young and Soroka 2012). The supervised sentiment analysis utilizes data with sentiment labels. Predicting the sentiment of uncategorized text with a proper training process is possible. It uses various algorithms with different levels of complexity like Naïve Bayes, Support Vector Machine, and neural networks (Liu 2012; Alaparathi and Mishra 2021; Bhuta et al. 2014). A complex algorithm like a neural network provides a better result in obtaining sentiment than other algorithms.

III. Issues and Challenges

There are a few issues associated with measuring public opinion from online data. First, deployed texts from users are different among data sources. Sentiment analysis is an opinion-mining task that determines user attitudes from texts. In other words, the analysis aims to collect underlying opinions, emotions, thoughts, and speculations (Liu, 2012). Online data available for political science research is mostly texts in various formats.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textual data includes

colloquial dialogue, slang, metaphors, and symbolic lexicon. Its length and language are also very diverse depending on the source. For example, Twitter only allows 140 words in every language. Government archives and news channels have formal documents without limitation in length. Extracting sentiment from these text types is critical to measure public opinion.

The anticipated result of sentiment analysis can vary significantly upon applied algorithm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extual data are vastly different. Each social networks have a unique group of users, and they have their expressions. Lexicon-based methods should have these slang and metaphors to yield acceptable performance. A dictionary built from Twitter has a low probability of successfully analyz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es. Expansive data is another issue for sentiment analysis. The lexicon-based algorithm needs a domain-specific dictionary, and neural networks require sentiment-labeled data. These data are unnecessary for an unsupervised approach, yet the method may not be as accurate as the other two techniques. The dictionary is harder to build compared to data with sentiment labels. Since sentiment analysis is an essential subject of academic research, there are available sentiment dictionaries for a number of languages. However, the meaning of a word can change over time, and its peculiar usage can generate unique meanings. For example, the Korean flag, Taeguekgi, is value-neutral and does not indicate political ideology. However, it can point to extreme conservatives in cyberspaces with a negative connotation. The dictionary should be up-to-date and domain-specific to incorporate this phenomenon.

Neural network-based sentiment analysis learns to classify different

attitudes from information given by training data. Supervised machine learning needs a training process in order to perform the classification task. The dataset is divided into two parts, train and test—the training data typically two-thirds of the entire dataset, which is in “text-sentiment” format. Texts and labels are inputs and outputs for the algorithm, and it automatically calc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 Therefore, the labeled training set's quality determines the algorithm's accuracy. Training data has to be significant in its size. Human coders read a massive number of texts and determine sentiment. Making quality training data is the most critical but expansive process. The pre-trained model, like BERT, does not demand extensive training data because it obtains baseline knowledge from public documents to perform a specific project. Therefore, human-labeled training data is unnecessary, depending on the sentiment analysis's characteristics and scope. Complex classifier, such as determining political ideology, still needs data with proper labels even if a pre-trained model is used.

Lastly, online data is unstructured, so it cannot be transformed into a tabular form. Previously the discussion only included textual data. However, there is more data available in cyberspace besides texts. For example, YouTube has a massive amount of video data. Instagram posts pictures and short comments. South Korean politicians actively utilize YouTube to communicate with constituents. There are many channels handling political news and issues, and each of these popular channels has many user comments related to the video. YouTube can be an excellent data source for combining AI-based analysis with images and text. Instagram is another example. It is a popular social network among younger generations.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have become crucial political subjects in South Korea. Instagram can be a

relevant source to analyze these peopl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rocess images and texts, and it is possible to extract significant insight from the combined data.

There are a couple of challenges to address i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es to obtain sentiments. First, unlike classical methods like a survey and a lexicon-based sentiment analysis, algorithms with training processes take much work to interpret. Statistical analysis requires a formula and input data to get results. The researcher designs analysis; thus, deciphering the model and the result is relatively logical and straightforward. Howev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takes inputs and outputs, not a model. For example, a BERT-based classifier takes a document and sentiment label. Then, the algorithm establishes a classification rule through the training process. It is impossible to know what a machine learns from the data, and only accuracy demonstrates the performance of the trained algorithm. Second, the training process of a neural network requires extensive computing resources. Learning cannot happen with a small amount of data. Typically, more extensive data yields better results in the analysis. It is the reason that pre-trained models demonstrate higher testing scores. For example, GPT-3, the base model of ChatGPT, uses 45TB of text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Wikipedia and books, to train (Brown et al. 2020). A standard computer cannot process this amount of data. A single RTX 8000 GPU takes approximately 655 years to train (Li 2020). Even fine-tuning this pre-trained model is challenging to process on an ordinary computer. Many cloud services provide computing resources capable of processing extensive data, yet they require much capital. Therefore, only researchers with physical and capital resources can attempt to run the analysis of artificial analysis.

IV. Conclus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unfamiliar topic in political science. Applying the technique to political issues and gaining academic implications is quite tricky. This study reviews and introduces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political science research with a focused example of online public opinion. We commonly measure how people think collectively through a poll. People can be a part of multiple groups, yet a poll does not consider this aspe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diffusion of the internet alter people's daily life. We ask questions to Google, search routes to a navigation app, post pictures on Instagram, and watch videos from YouTube. Our behaviors leave digital traces online, which can provide hints to understand how to think and act.

For this reason, online space becomes essential to researchers. There are two streams of studies regarding online public opinion. One group is to distinguish the qualities of online space—the other group studies cyberspace as a factor in influencing political phenomena, especially electio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o figure out how to measure public opinion using online data.

People's digital footprints are primarily texts. Some services like Instagram and YouTube use other data formats besides text, yet most social network services take textual data from users. Opinion mining is a tool to measure online public opinion and sentiment analysis the specific technique. There are many approaches to performing sentiment analysis, from dictionari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xicon-based model is the most simplistic one, which counts and scores sentiment words according to a domain-specific dictionary.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build a reliable sentiment dictionary that directly connects to the performance of a model. Another model utilizes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unsupervised and supervised models, yet the latter provides higher accuracy. Artificial intelligent-based models need training in human-labeled data. This process consumes many capital and computing resources. The most advanced stage in sentiment analysis is regarding using the pre-trained model. There are algorithms finished training using texts from all subjects. It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cost for individual researchers to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o one's study. However, even with these pre-traine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there are issues and challenges to performing political science studies. Online texts are vastly different from formal docu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specific styles used in cyberspace. It indicates that different training data is necessary to measure public opinion from various social platforms. Creating human-labeled training data can be complex and expansive. Sentiment analysis uses texts, but there are various formats of data available in online space. Especially more digital data are in the forms of images and video.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andle these data types but is not fully utilized in political science. There are also challenges associated with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model is like a black box i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he researcher inputs texts and sentiments to a model. The machine learns to duplicate how the human coder classifies. Considerable computing power is required to process a substantial volume of data. It halts researchers from actively applying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spite the difficulties, artificial intelligence possesses advantages.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use sample data and focuses on the

population by nature. It indicates that a well-performed analysis can provide insights complementary to a survey. The technique can target specific populations in addition to the general public. The possibility of automation is another advantage of text classifi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re is a sufficient dataset, a machine can automatically produce a result based on rules encrypted in the training set. Society continuously undergoes digital transformation. People generate more digital data as their lives are more intimately related to online spac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key to studying the future of society as it uses digital data to interpret how people think and behave.

Reference

- Alaparathi, Shivaji, and Manit Mishra. 2021. "BERT: a sentiment analysis odyssey." *Journal of marketing Analytics* 9: 118-126.
- Baek, Yeon-sik. 2023. "President Yoon Emphasizes ChatGPT ... Government ministries react seriously." *Digital Today* (February 15).
- Bermingham, Adam, and Alan F. Smeaton. 2011. "On using Twitter to monitor political sentiment and predict election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Sentiment Analysis where AI meets Psychology (SAAIP).
- Bourdieu, Pierre. 1979. "Public opinion does not exist."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1: 124-130.
- Buchholz, Katharina. 2023. "ChatGPT Sprints to One Million Users." *Statista* (January 24).
- Bhuta, Sagar, Avit Doshi, Uchit Doshi, and Meera Narvekar. 2014. "A Review of Techniques for Sentiment Analysis of Twitter Data."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lligent computing techniques (ICICT). IEEE.
- Campbell, Angus, Phil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e, Harold D., Marianne C. Stewart, Mike Ault, and Euel Elliott. 2004. "Men, Women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Approv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31-51.
- Dodds, Peter S., Kameron D. Harris, Isabel M. Kloumann, Catherine A. Bliss, and Christopher M. Danforth. 2011. "Temporal Patterns of Happiness and Information in a Global Social Network: Hedonometrics and Twitter." *PLoS ONE* 6(12): e26752.

- Duggan, Maeve, and Joanna Brenner. 2013. *The demographics of social media user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Elmer, Greg. 2013. "Live research: Twittering an election debate." *New media & society* 15(1): 18-30.
- Eom, Kihong. 2020. "Whose Opinions are Represented in the Online World?" *Journal of Future Politics* 10(1): 99-122.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 *The macro po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ch, Fabio. 2013. "(Wisdom of the Crowds)²: 2010 UK Election Prediction with Social Medi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10(1): 57-71.
- Gonzalez-Bailon, Sandra, Rafael E. Banchs, and Andreas Kaltenbrunner. 2010. "Emotional reactions and the pulse of public opinion: Measuring the impact of political events on the sentiment of online discussions." arXiv: 1009.4019.
- Gonzalez-Bailon, Sandra, Rafael E. Banchs, and Andreas Kaltenbrunner. 2012. "Emotions, public opinion, and U.S. presidential approval rates: A 5-year analysis of online political discuss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8(2): 121-143.
- Hampton, Keith N., Lauren Sessions Goulet, Lee Rainie, and Kristen Purcell. 2011. *Social networking sites and our lives*. Washington D.C.: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Herbst, Susan. 2001. "Public opinion infrastructures: Meanings, measures, media." *Political Communication* 18(4): 451-464.
- Jenson, Michael J., and Nick Anstead. 2013. "Psephological investigations: Tweets, votes, and unknown unknowns in the republican nomination process." *Policy & Internet* 5(2): 161-182.

- Jin, Borae, and JungAe Yang. 2015. "Exploring the types of SNS use based on personality traits, offline activities, political orien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5): 239-271.
- Klašnja, Marko, Pablo Barberá, Nick Beauchamp, Jonathan Nagler, and Joshua A. Tucker. 2017. "Measuring public opinion with social media data." *Oxford Handbook of Polling and Survey Method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reiss, Daniel. 2016. "Seizing the moment: The presidential campaigns' use of Twitter during the 2012 electoral cycle." *New media & society* 18(8): 1473-1490.
- Kriner, Douglas, and Liam Schwartz. 2009. "Partisan dynamics and the volatility of presidential approv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3): 609-631.
- Lee, Hana, and Seung-Mock Yang. 2017. "Effects of demographics and personality factors on categorizing SNS users into three group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2): 5-40.
- Liu, Bing.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5(1): 1-167.
- Lynch, Marc. 2011. "After Egypt: The limits and promise of online challenges to the authoritarian Arab State." *Perspectives on Politics* 9(2): 301-310.
- MacDougall, Curtis D. 1952.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a guide for newspapermen and newspaper reader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Malik, Momin, Hemank Lamba, Constantine Nakos, and Jurgen Pfeffer. 2015. "Population Bias in Geotagged Twee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9(4)
18-27.

Mellon, Jonathan, and Christopher Prosser. 2017. "Twitter and Facebook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population: Political attitudes and demographics of British social media users." *Research & Politics* 4(3): 1-9.

Mislove, Alan, Sune Lehmann, Yong-Yeol Ahn, Jukka-Pekka Onnela, and J. Rosenquist. 2011. "Understanding the demographics of Twitter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5(1): 554-557.

Navkiran. 2023. "73 Important ChatGPT Statistics & Facts for Mid Feb 2023 + Infographic." Nerdy Nav (February 16).

O'Conner B., R. Balasubramanyan, B. R. Routledge, and N. A. Smith. 2010. "From tweets to polls: Linking text sentiment to public opinion time ser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2010.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ers, Douglas, and Nancy L. Rose. 1985. "Passing the president's program: Public opinion and presidential influence in congr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 183-196.

Shamma, David A., Lyndon Kennedy, and Elizabeth F. Churchill. 2009. "Tweet the debates: understanding community annotation of uncollected sources."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SIGMM workshop on Social media: 3-10.

Skoric, Marko, Nathaniel Poor, Palakorn Achananuparp, Ee-peng Lim, and Jing Jiang. 2012. Paper presented at 2012 4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583-2591.

- Splichal, Slavko. 2012. "Public opinion and opinion polling: Contradictions and controversies." In *Opinion Polls and the Media* edited by C. Holtz-Bacha and J. Stromback. London: Palgrave Macmillan.
- Stimson, James. 1999. *Public Opinion in America: Moods, Cycles, and Swings*. New York: Routledge.
- Thelwall, Mike, Kaven Buckley, Georgios Paltoglou, Di Cai, and Arvid Kappas. 2010. "Sentiment strength detection in short informal tex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12): 2544-2558.
- Tucker, Joshua A., Jonathan Nagler, Megan M. Metzger, Pablo Barbera, Duncan Penfold-Brown, and Richard Bonneau. 2016. "Big data, Social media, and protest." In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Discovery and Prediction*, edited by R. Michael Alvarez.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fekci, Zeynep, and Christopher Wilson. 2012. "Social media and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rotest: observations from Tahrir Square." *Journal of Communication* 62(2): 363-379.
- Tumasjan, Andranik, Timm O. Sprenger, Philipp G. Sandner, and Isabell M. Welpe. 2011. "Election Forecasts with Twitter: How 140 Characters Reflect the Political Landscap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9(4): 402-418.
- Vaccari, Christian, Augusto Valeriani, Pablo Barbera, Richard Bonneau, John T. Jost, Jonathan Nagler, and Joshua Tucker. 2013. "Social media and political communication: A survey of Twitter users during the 2013 Italian general election." *Rivista Italiana di scienza politica* 43(3): 381-410.
- Young, Lori, and Stuart Soroka. 2012. "Affective News: The Automated

Coding of Sentiment in Political Texts.” *Political Communication* 29(2): 205-231a.

Weaver, Warren. 1948. “Science and complexity.” *American Scientist* 36(4).

인공지능 기술의 정치학적 적용에 대한 연구 - 온라인 여론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김 대 식*

논문요약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 적응하고 리드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T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남기는 매일의 디지털 흔적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론 측정 방식에 있어 방법의 변화를 설명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한다. 여론은 정치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연구자들은 서베이를 통해 여론을 측정하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 중 하나인 감성분석방법을 통해 텍스트에서 감성을 추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감성자전을 활용해 감성분석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BERT와 같이 훈련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성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온라인 상의 텍스트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독특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현재는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이미지 및 비디오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모델은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이러한 과정을 연구자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산능력을 보유한 컴퓨터 장비가 필요하고 이는 일반 연구자에게 큰 장애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에게 삶에 크게 들어와 있다.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감성분석, 여론, 연구방법

투고일: 2023.02.19.

심사일: 2023.02.21.

게재확정일: 2023.03.13.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연구방법논총』 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20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 (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혹은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즐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 이하 EMS)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5.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 233).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6.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7.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권(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꺼쇠 (『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 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 허생,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서울: 호박사, 231-263.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2013.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선택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봄), 101-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5.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편집위원회 (053-950-7396, basicdatakreditor@gmail.com)로 문의한다.

『연구방법논총』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편집위원회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제재방식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방법논총』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방법논총』을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할 때는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연구방법논총』 편집 및 심사 규정

제정 2016.01.01. 규정 제1호

개정 2018.11.08. 규정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방법논총』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호선한다. 단, 초대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3장 『연구방법논총』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연구방법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JAMS 웹사이트(<http://polisci.jams.or.kr/>)를 통해 투고한다(2018.11.08. 개정).
2. 『연구방법논총』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연구방법 논총』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연구방법논총』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연구방법논총』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호-1월 말일, 2호-5월 말일, 3호-9월 말일(2018.11.08. 개정).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로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연구방법논총』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 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연구방법논총』은 연 3회 발간하며, 1호는 3월 31일, 2호는 7월 31일, 3호는 11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11.08. 개정).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
|---------|---------|---------|-----------------|
| 가 | 가 | 가 | 게재 가 |
| 가 | 가 | 수정 후 게재 | |
| 가 | 가 | 게재 불가 | |
|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제11조 (재심후 게재여부 결정) 초심 결과,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편집위원이나 새로 지정한 심사위원 1인에게 초심결과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심사는 '게재' 혹은 '게재불가'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2. 기일- 재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방법논총』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방법논총』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정관 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연구방법논총』 편집위원명단

| 직책 | 이름 | 소속 |
|-------|-----------------|-----------------------------------|
| 편집위원장 | 조진만 | 덕성여자대학교 |
| 편집위원 | 박원호 | 서울대학교 |
| | 박현석 | 국회미래연구원 |
| | 엄기홍 | 경북대학교 |
| | 지병근 | 조선대학교 |
| | 차재권 | 부경대학교 |
| | 이유신 | 영남대학교 |
| | 이재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
| | 정한범 | 국방대학교 |
| | 황태희 | 연세대학교 |
| | Satoshi Machida |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
| 편집간사 | 민정훈 | 국립외교원 |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 2023 Spring Vol.8, No. 1 |

- Has Regional Voting Changed? : Evidence from the 14th~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Jisung Yoon / 1
- A Study on Participation and Practice Experience of Community-Based Citizens Advocacy Projects
Ji Hyun Nam · Jihye Jeon / 27
- Re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 Focusing on Estimation of Online Public Opinion
Daesik Kim / 77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